

신냉전 대결과 다극화로 향하는 세계, 한반도 평화의 과제

일시 | 2023년 2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사회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국민중행동 자평통특위장

발제

2023년 신냉전 대결과 국제질서의 변화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위기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해법을 찾다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토론 2023년 정세전망 및 투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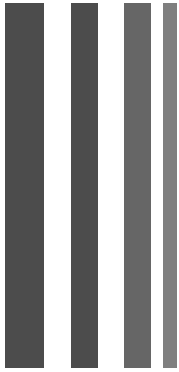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장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순서

○ 프로그램

좌장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특위장

발제

■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 질서 : 몇 가지 중간 평가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4

■ 위기의 한반도, 평화 해법을 찾아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24

토론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33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38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47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장52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6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I | **발제 1.**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 몇 가지 중간 평가**

II |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 몇 가지 중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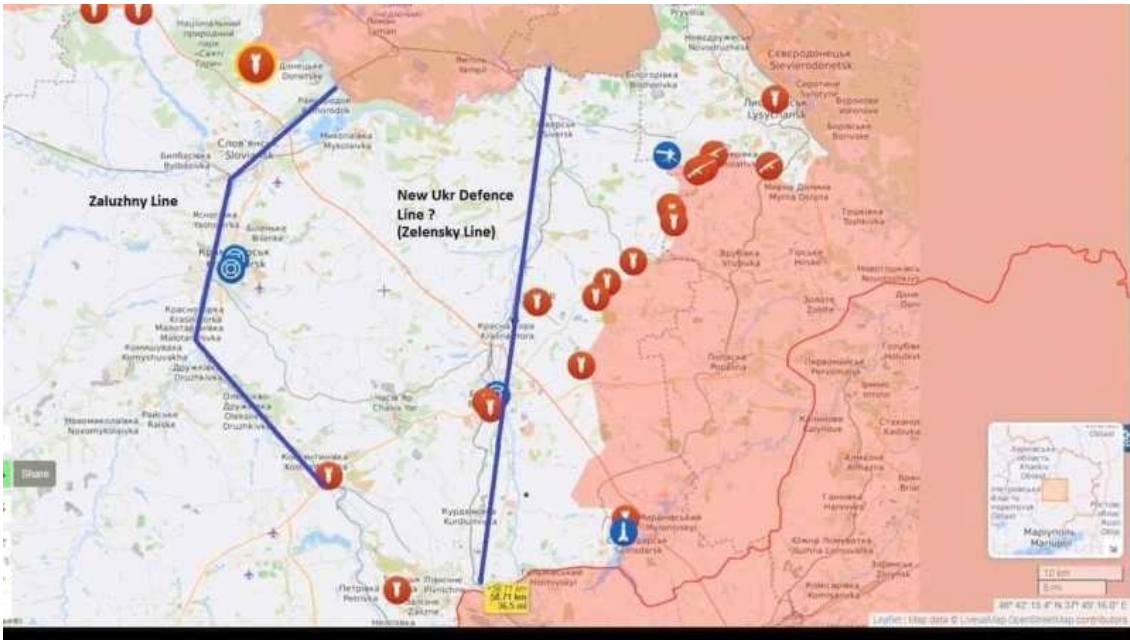
이해영 |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1. 바흐무트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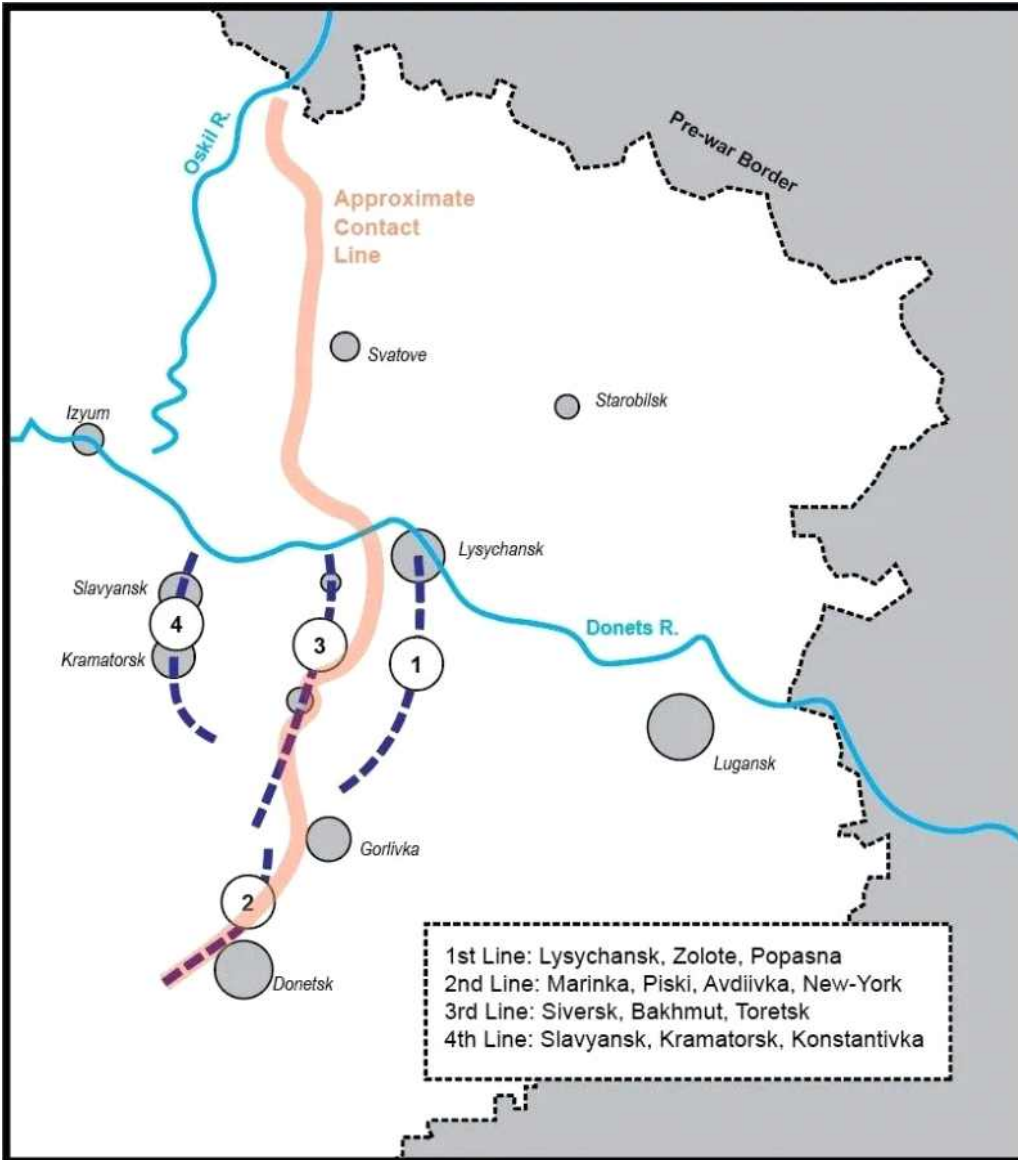
작은 불씨 하나가 광야를 태우듯, 어떤 전장의 전투는 세계사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돈바스의 린치핀 바흐무트 전투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지금은 러시아연방으로 된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러시아어로는 아르테모프스크 즉 러시아 혁명 때 아르테모프라는 혁명가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개전 이후 지금까지 모든 전선을 통틀어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이다.

바흐무트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방팔방으로 이어진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최대 병참기지다. 또 지난 8년에 걸친 돈바스내전 기간 철통 같이 요새화한, 전쟁 전까지 약 7만 인구의 소유이다. 러시아군으로선 바흐무트를 점령하면 이제 북으로 시베르스크, 북서로 슬로비안스크 그리고 크라마토르스크를 향하게 된다. 이 두 도시 북쪽은 그냥 대평원이다. 크라마토르스크는 과거 도네츠크주의 임시주도이고 현재 우크라이나군 사령부가 위치한다. 이 2개 도시가 넘어가면 도네츠크주는 완전 '해방'된다. 이미 루한스크주는 100% 러시아로 넘어왔기 때문에 2개 도시를 장악하면 돈바스해방이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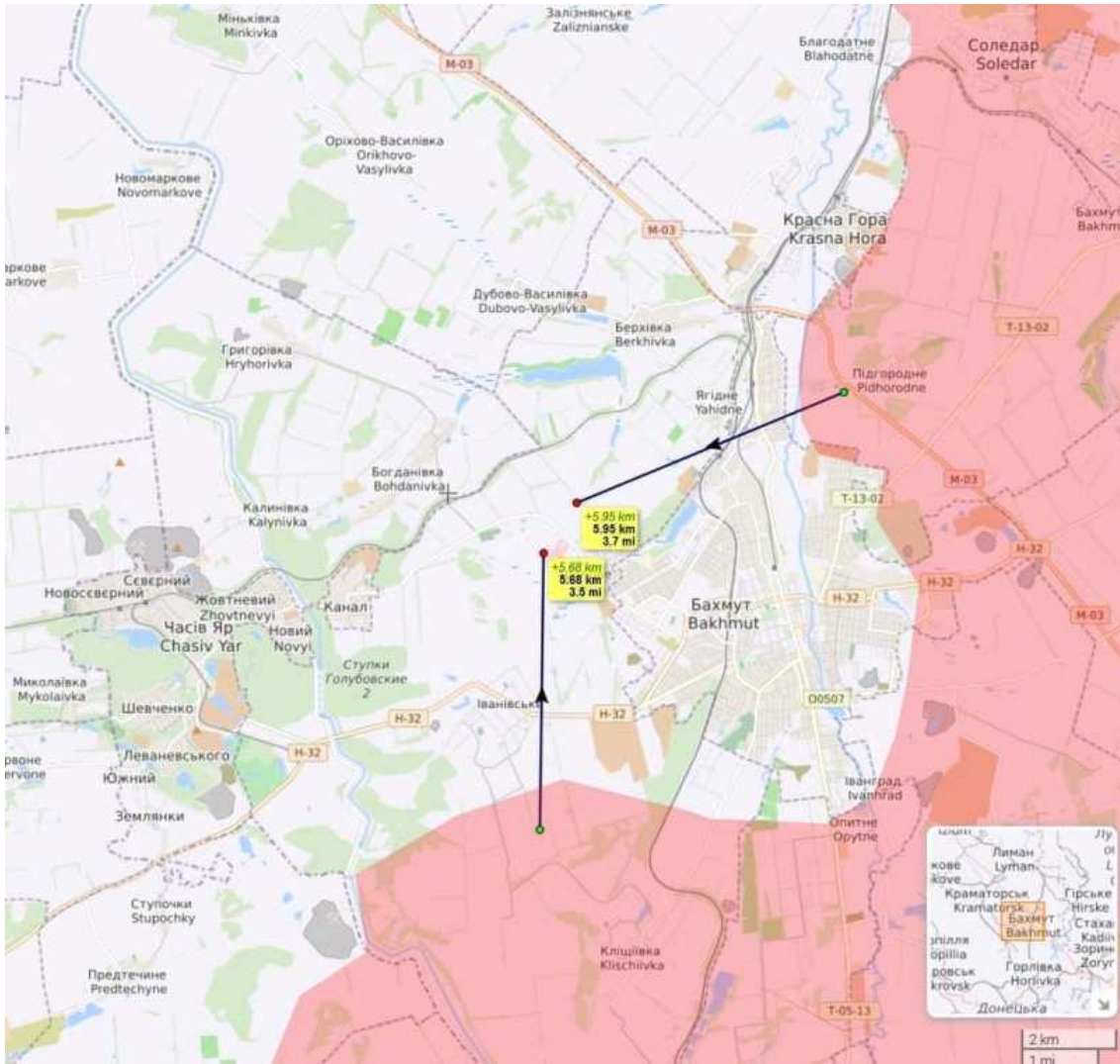


<그림1> 젤렌스키방어선과 잘루즈니방어선(2022년 7월) ©필자 제공



<그림 2> 돈바스 방어선

<그림1>은 작년 2022년 7월 당시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가 러시아군에 함락될 시점을 나타낸 것이다. 당시 젤렌스키는 위 양대도시가 함락되고 ‘젤렌스키방어선’이란 결 설정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부측은 그 후방인 슬라비안스크와 도네츠크주 임시주도이자 사령부가 위치한 크라마토르스크를 잇는 ‘잘루츠니방어선’을 주장했다. <그림2>는 돈바스의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보여준다. 작년 7월 붕괴된 것이 제1방어선이다. 그림의 제3방어선이 젤렌스키방어선이고 그 중심에 바흐무트가 위치해 있다. 바흐무트는 작년말 젤렌스키의 방미 직전 이곳을 전격 방문 병사를 시상, 격려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곳이다. 그리고 제2방어선은 도네츠크시 외곽에 인접한 아브디프카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방어선이다. 바흐무트 못지않게 치열한 전투가 몇 달째 계속되어 왔고 그 중심 아브디프카를 향해 현재 러시아군측이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4방어선이 바로 잘루츠니방어선이다.



<그림3> 바흐무트 현황

<그림 3>은 바흐무트의 현재상황을 보여 준다. 바로 얼마 전 북쪽의 솔레다르가 함락되었다. 바흐무트의 주전은 바그너 PMC(군사기업)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바흐무트는 ‘작전상 포위 (operational encirclement)’ 를 향해 가고 있다. 러시아 군사교리상 완전포위는 적에게 ‘죽든가 항복하든가(death or surrender)’ 를, 작전상 포위는 ‘항복하든가 (포격하에) 도망가든가(surrender or leave)’ 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림3>에서 보듯 세 방면에서 에워싸서 거리상 남북 각각 6Km정도 공간만 열려있고 매일 조금씩 닫히는 중이다. 바흐무트와 이 축선에 우크라이나군은--논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27개~34개 여단, 8만~9만5천명을 배치했다. 단일전장으로서는 개전 이후 최대치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작년 말 인터뷰에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병력’ 이 약 20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보자면 이 축선에 우크라이나군 현재 전투병력의 절반가량이 밀집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 제4방어선까지 합하면 최대 70%에 달한다.

이 바흐무트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막대한 병력과 물자를 치명적으로 소모했다. 그 누구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약 3만5천명 정도가 전사했다고도 한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작년 9월 부족한 병력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이지움을 비롯한 하르코프 방면을 내주고 퇴각했던 그 반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군은 보급로가 불안해지자 헤르손 즉 드네프로강 서안에서 작전상 퇴각을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하르코프에서의 ‘전술적’ 승리를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또 헤르손시를 회복하면서 ‘역사적 승리’를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헤르손은 아무런 전략적 역할도 하지 못하고 유령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하르코프와 헤르손 양쪽 모두에서 막대한 병력 및 물자의 손실을 치렀다. 여기에 더해 바흐무트 전투에 끌려 들어와 즉 러시아군의 ‘소모전’에 유인당해 또다시 병력과 물자를 ‘그라인딩’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은 ‘보병위주 기동전’을, 반면 러시아군은 ‘화력위주 소모전’을 주요 작전 개념으로 채택해 왔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도 그럴 것이 현재 12차에 달하는 국민총동원을 통해 병력을 조달해 왔고, 한때는 그 수가 100만에 달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정규군 외에 향토사단개념인 국토방위군(Territorial Defence)과 네오나치 등 민병대 개념에서 나온 국민방위군(National Guard)등으로 구성된다. EU집행위 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은 지난해 11월말 우크라이나군 10만명이상이 전사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전사자(KIA)가 10만이라면 부상자(WIA)는 최소 그 3배~4배로 추정한다. 즉 30만~40만이다. 이들을 합한 사상자(casualties)는 40만~50만이상이라는 말이다. 가장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군 전사자가 15만을 넘었다고 여러 소스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는 더욱 증가해 자칫 60만에 달한다는 말이다. 전황이 이렇게 흐르게 된 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바흐무트다. ‘고기분쇄기(meat grinder)’라 불리는 이 비좁은 공간에서 지금은 쫓겨난 우크라이나측의 대표적인 프로파간다리스트 아레스토비치가 말하듯 1:9정도의 압도적 화력격차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말 그대로 ‘갈려’ 나가고 있다. 최근의 우크라이나측 동원은 동원이라기보다 차라리 노상납치라 할 정도로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바흐무트 전선 배치를 거부하거나 탈영하는 사례가 빈발, 우크라이나측은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이 발 벗고 나섰다. 1월 20일자 AF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료의 말을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이곳에서 러시아의 승리는 전쟁의 어떤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은 방어를 더 잘할 수 있는 위치로 퇴각해야 한다.” 바흐무트가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작전상으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러시아군이 승리해봤자 전체 전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러티브는 이미 미 네오콘 썩크탱크인 전쟁연구소(ISW)에서 제작 보급한 것이다.¹⁾ 다시 말해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곳에 우크라이나군은 꾸역꾸역 병력의 절반가까

1) 슬레다르가 함락되고 바흐무트도 외곽에서부터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전쟁내러티브를

이를 밀어 넣었다는 말이다. 과연 이들 말이 맞는지 입증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돈바스의 제2, 제3방어선이 붕괴되면 남을 나머지 제4방어선의 후방을 향해 러시아군은 바로 옆 자포로제전선에서 이제 공격을 개시한 상태다. 제4방어선의 보급로와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기동이라 할 만하다. 이런 예상에서 본다면 앞으로 있을 바흐무트 함락은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최대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까지도 러시아군의 본격적인 동계공세가 언제, 어디서 개시될 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출된 상태지만 아무도 모른다. 바흐무트 등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증가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또 전황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미국 등 나토의 위기감도 확산되는 중이다. 얼마 전 8차 람슈타인 서방대책회의에서 결의된 우크라이나군 지원을 위한 글로벌 ‘전차 모으기 캠페인’은 이 위기감의 반증이라 할 만하다. 심지어 크림반도 ‘탈환’을 위한 장거리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지원까지도 운위되고 있다. 여기에 독일 레오파드2 전차 등에 만일 열화우라늄탄을 장착한다면 이를 대러 ‘핵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대사의 발언도 전해진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3차 세계대전까지 몇 걸음 남지 않았다. 서방은, 아니 미국은, 아니 네오콘은 러시아에게 지는 것보다 차라리 3차 세계대전을 택할 것이다. 지금 전쟁은 지고 있다(아래 <표1>).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첫째, 솔레다르건 바흐무트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작전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방부 대변인도, CNN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물론 이 3단어 ‘군사적’, ‘전략적’, ‘작전상’ 중 어느 단어를 고를 지는 오로지 발화자의 몫이다. 이 내러티브를 설계한 곳이 미워싱턴의 소위 민간연구소라는 전쟁연구소ISW다. 미 방산업계의 돈을 받아 미네오콘 성가정holy family 케이건Kagan가가 운영하는 가내기업이자 썬크탱크다. 케이건가는 리투아니아에서 이민온 유대인 집안이다. 미네오콘 원조중 일인인 도널드 케이건 예일대 역사학교수의 두 아들과 두 며느리로 구성된 가내기업이 바로 ISW다. 현재 ISW의 이사장은 둘째 며느리다. 아마 예일대 출신일거다. 미네오콘에 예일출신들이 간혹 눈에 띄는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가 예일 교수였기 때문이다. 장남 로버트는 이미 알려진 네오콘이다. 로버트의 부인이 그 유명한 현 미국무차관 빅토리아 눌런드다. 눌런드는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이다. (나는 미리 말하지만 반유대주의하곤 무관하다). 그래서 장차남,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이렇게 구성된 것이 미 네오콘 성가정이다.

ISW의 일일전황보고서는 이른바 집단서방의 엘리트라면 다 받아본다. 혹 못받아 보더라도 그렇게 아쉬워할 이유는 없다. 이들 홈페이지 가면 되기 때문이다. 진즉부터 ISW는 바흐무트가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멀리 내다보는 수를 둔 셈이다. 하지만 가치도 없는 데 왜 우크라이나 최소 16개, 최대 24개 여단병력, 알려지기로 가로세로 10Km에 불과한 이 비좁은 공간에 근 9 만명에 육박하는, 그리고 소모가 심각해지자 북부의 향토사단병력에다 경찰까지 차출해 밀어 넣는 지 설명해야 한다.

둘째, 우크군도 그렇지만 러군도 거의 비슷하게 전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솔레다르, 바흐무트전투는 바그너부대가 주축이다. 그런데 가장 반푸틴적인 매체 미디어조나Mediazona는 2022년 12월 30일 현재기준 바흐무트 전투가 개시된 지난 가을부터 이 기준일까지 총 101명이 전사했다고 했다. 그래서사상자는 500명이 넘을 것이다. 그러면 우크측은 바르무트, 솔레다르전투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까. 그 누구도 정확한 수치는 알수 없다. 해서 ‘속설’에 따르면 솔레다르에서만 우크군 14개 여단에 걸쳐 7천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바흐무트는? 사상자 20,000-25,000명이라고 한다. 이 수치들은 결코 확인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현재 이 지역전투에서의 양측 사상자비는 1:10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 이제 ‘값싼’ 전투력 -노동력이 아니다 - 보고 ‘투자’한 투자자 서방에서도 근심이다. 그렇게 자꾸 한 쪽에다 다 밀어넣으면 -몰빵하면- 어찌냐는 불멘소리다. 파이낸셜 타임즈인가 어디선가에서 나온 말이다. 당연히 우크군부에선 솔레다르에서 의미없는 이른바 ‘역공’하지 말고 바흐무트에 집중하자, 그리고 여기도 안되면 적기에 퇴각해서 크라마토르스크 전선으로 이동하자고 한다. 하지만 군통수권자 곧 젤렌스키가 우긴다. 한국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코멘테이터중에 ISW가 항상 끼어 있음을 알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방의 주류언론이 ISW를 받아 적고, 이를 다시 받아 적는 것이 한국언론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평론가 마르티아노프 말마따나 ‘군대도 안가본 것들’ 즉 네오콘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전세계를 전화로 몰아가고 있다.

<표 1> 이스라엘정보기관 모사드의 우크라이나전 보고

모사드 러우전 정보			
		러시아 손실	우크라 손실
1	항공기	27	302
2	헬기	56	212
3	드론	200	2,750
4	전차 장갑차	889	6,320
5	야포	427	7,360
6	방공망	12	497
1	전사자	18,480	157,000
2	전상자	44,500	234,000
3	포로잡힘	323	17,230
4	병력	418,000	734,000
5	예비대	350,000	
	나토(장교,교관)		234
	나토용병		2,458
	기타용병		5,370

(*이 표는 모사드의 정보보고 형태로 유포된 자료를 한국 네티즌이 번역한 것이다. 진위 여부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인용해 둔다)²⁾

2) 러시아군은 도대체 몇 명이나 전사했을까? 전쟁이란게 누가 누구를 죽이고 상하게 하는 일이라 이런 통계에 극도로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일전에 포스팅했던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 의장의 발언이 회자된 이후 더욱 그렇다. 교조적 네오콘인 폰 데어 라이엔이 이 극비사항을 폭로?한 이유는 그만큼 러군이 잔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즉 십만명 이상의 우크군이 전사했다는 이 사실 말이다. 대개 사상자 casualties는 전사자KIA + 부상자WIA를 합한 수치다. WIA는 KIA X 4가 공식이다. 그래서 우크군 사상자는 50만이 훨씬 넘는다는 말이 된다.

그러자 켈렌츠크가 강력히 항의해 폰 데어 라이엔 영상은 긴급편집되었고, 우크측은 러군이 10만이상 전사했다고 긴급히 말을 지었다. 발설자가 폰데어 라이엔이니 아니라고도 못하니 말이다. 이 말을 받아 미국방부도 러군 10만 이상, 양측 다 그러니 20만 이상 사망설이 만들어 졌다. 이 맥락을 알리 없는 한국 언론은 당연히 따라 배졌다.

퍼시 라이엇 Pussy Riot이란 이름의 러시아밴드가 있다. 러시아의 반체제? 아니 정확히는 아주 철저한 반푸틴 밴드다. 그러니 서방에서 특히 환대를 받는다. 하지만 러 당국엔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 이 밴드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언론매체가 미디어조나 Mediazona다. 현재 이 미디어조나의 오너는 간첩혐의로 국제수배중이다. 그리고 이 매체는 러에서 금지되어 있다. 해외간첩단이란 명목으로 말이다. 이 매체가 '세컨드 CIA' NED (민주주의기금)나 소로스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나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바로 이 미디어조나가 영국BBC방송과 콜라보해서 러군 전사자 수치를 조사해서 그 무슨 주가 전광판처럼 만들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내가 듣기로, 러전역에 걸쳐 모든 부고를 수작업으로 조사해 사망자의 주소까지 다 확보했다고 한다. 진짜 독을 품고 덤벼드는 셈이다.

그렇다. 한 가지는 명백하다. BBC와 콜라보해서 발표한 미디어조나의 러군 전사자수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축소'할리 없다는 그 점 말이다. 이미 러국방부는 약6천명의 러군 전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자 그럼 러군 전사자는 몇 명일까. 작년 12월 30일 현재 10,229명이다. 이 날을 기준 2주간의 전사자는 482명이다. 일일 약 34명이다. 부분징병된 병사들 중에 총 514명이 전사했고, 저 유명한 -악명높은? - 바그너부대는 12월 한 달동안 41명이 전사, 그리고 바흐무트전투에서 러군 총 101명이 전사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가장 철저한 반푸틴 그룹 매체가 밝혀낸 수치 아닌가. 그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 의장이 발설한 특급 기밀 즉 10만명 이상의 우크군 전사자의 1/10이거나 그 미만이란 말이다. 이미 우크군이 매일 300명 가량이 전사하고, 매

Tank table			
Country	type of tank	number of tanks in force	number of tanks promised Ukraine
Germany	Leopard	320	14
Norway	Leopard	36	8
Portugal	Leopard	37	4
Netherlands	Leopards	18 **	18
Poland	Leopards	247	14
Denmark	Leopards	57	na
Finland	Leopards	200	na
Spain	Leopards	347	na
Canada	Leopards	80	na
UK	Challenger 2	227	14
France	Leclerc	222	na
US	Abrams	5,000	31
Sweden	Stridsvagn 122	280	na
TOTAL COMMITMENTS			103
Source: media reports, *estimated tanks still functioning in Ukraine, half of 3,000 deployed destroyed, ** on lease from Germany			
Russia	T-72 & other Soviet tanks	10,200	1,660*
Russia	T-14 Armata MBT	40	handful reported seen

<표2>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전차지원

일 일개 대대급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속설'에 비추어, 하루 러군 34명'만' 전사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 일일 러군 전사자도 우크군에 비해 1/10이란 말이 아닌가. 그리고 역시 알려지기로 바흐무트전투에서 우크군 전사자가 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아니 미디어조나가 밝혀낸(?) 바흐무트전투의 러군 총 전사자는 101명이라는 데 이걸 또 무슨 소린가. 물론 이 말은 미디어조나도 천연하듯이 실제 수치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이다. 대개 전쟁에서 사상자비가 1:3만 되어도 꽤 배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1:10 아닌가. 이런 전쟁을 놓고 승과 패를 운위하는 것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아 보인다.

Tank table

Country	type of tank	number of tanks in force	number of tanks promised Ukraine
Germany	Leopard	320	14
Norway	Leopard	36	8
Portugal	Leopard	37	4
Netherlands	Leopards	18 **	18
Poland	Leopards	247	14
Denmark	Leopards	57	<u>na</u>
Finland	Leopards	200	<u>na</u>
Spain	Leopards	347	<u>na</u>
Canada	Leopards	80	<u>na</u>
UK	Challenger 2	227	14
France	Leclerc	222	<u>na</u>
US	Abrams	5,000	31
Sweden	<u>Stridsvagn 122</u>	280	<u>na</u>
TOTAL COMMITMENTS			103
Source: media reports, *estimated tanks still functioning in Ukraine, half of 3,000 deployed destroyed, ** on lease from Germany			
Russia	T-72 & other Soviet tanks	10,200	1,660*
Russia	T-14 Armata MBT	40	handful reported seen

2. 미국의 휴전안

1) 우크라이나는 현재 숙청작업이 한 참이다. 젤렌스키의 측근인 내무장관은 헬기 추락사했다. 암살설이 여전히 유력하다. 그의 대표적인 마우스피스 아레스토비치는 쫓겨 났다. 친구인 국방장관은 군납비리로 역시 쫓겨 났다. 그의 오래된 배후인 부패한 올리가르히 콜로모이스키는 가택수색을 당했다. 그 외 다수의 고위직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물러났다.

이 모든 것이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글썄? 현재도 진행중인 이번 전쟁 최대격전지 바흐무트 전투는 끝이 보인다. 몇 주 전부터 미국은 병력을 후퇴시킬 것을 여러 경로, 여러 인물을 통해 '권고'했다. 방어선을 재편하라는 말이다. 젤렌은 모두 거절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끝까지 이곳을 사수하겠다고 했다. 바그너PMC 프리고진이 말했다. 제발 이곳에서 끝까지 싸워달라고 젤렌을 격려했다. 이제 마지막 보급로 하나가 달랑거린다. 이 퇴로가 차단되면 러는 항복하던가, 죽던가를 요구할 것이다. 이때 패전책임은 전적으로 젤렌이 져야 한다.

키신저가 베트남전쟁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 '미국의 적이 되는 건 위험하다. 하지만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fatal이다.' 이제 그 '치명적인' 순간이 다가온다. 그래서 젤렌의 수족을 정리한 것이라는 설이 제기된다.

2) 워싱턴정가의 여러 곳에서 각종 보고서가 줄맞춰 등장한다. 먼저 미 랜드RAND연구소 보고서다. 장기전은 미국익에 해롭다는 말이다. 미 국방부의 OEM으로 보인다.

(1)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는 미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한다. 2019년에는 러의 과잉팽창을 유도해 그 약점인 경제를 공략 전복시킨다는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2022년 1월 누출된 비밀보고서에서는 독일녹색당의 약점을 이용 독일을 대러제재 진영에 포섭, 긴박시켜 독, 러 관계를 복구불가능하게 만든 뒤, 독일경제 나아가 EU경제를 붕괴시켜 미국에 종속된 위성경제권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주창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장기전을 회피'하는 것이 미국익에 부합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전회피는 이 전쟁의 미국익에 대한 가성비분석의 결과이다. 이익에 비해 손해가 더 크다는 뜻이다.

<장기전의 잠재적 비용>

1. 러핵사용 리스크 가중
2. 대우크 경제, 군사적 지원으로 인한 미예산부담증가
3. 우크라이나의 인명, 피난 등 휴머니테리안 고통증가
4. 글로벌경제 불황과 이로 인한 미국경제의 영향
5. 다른 글로벌 우선순위 사안에 대한 집중저해
6. 미러관계 중단으로 인한 미국익손실

7. 러의 추가적 영토획득 가능성

8. 러의 대중 의존 가중

이상 8가지 이유로 장기전 대신 이 보고서는 출구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1. 어느 일방의 완전승리는 불가능 2. 한국전모델인 휴전협정 3. 정치적해법인 평화협정, 이 3가지 중 하나다. 이 중 '협상을 통한 해법'으로 평화협정이 그나마 나은 옵션이다. 이를 위해 우크에는 군사지원을 포함한 안정보장을 러에는 제재완화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첫째,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한 정세 특히 전황을 전제하고 있다. 러군의 하르코프와 헤르손 철수를 우크의 '승리'로 해석하고, 러군의 군사적 잠재력의 소진을 전제한다는 말이다. 이는 러군 철수를 피상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점 러의 철수는 군사적 패배의 결과라기보다, 병력부족으로 인한 전선축소 그리고 보급로 불안으로 인한 작전상의 철수로 봐야 한다.

둘째, 이 보고서는 당시 시점 개전초와 비교 최소화된 러 점령지를 고정한 뒤 나머지 영역을 미국의 영향권에 항구적으로 포섭할 경우를 상정한다. 따라서 이 시점의 현상status quo이 향후 미국의 지배유지비용을 따져 볼 때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 보고서는 대러제재가 더 이상 러의 노선변경을 강제할 레버리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넷째, 나는 그럼에도 네오콘의 장기전개념에 다른 목소리가 나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고 본다. 다시 말해 장기전은 러도 그렇지만 미국에게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3차대전 등 '하이리스크'를 의미한다. 이 하이리스크가 하이리턴에 의해 필요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할 경우 이는 러뿐만 아니라 미의 약화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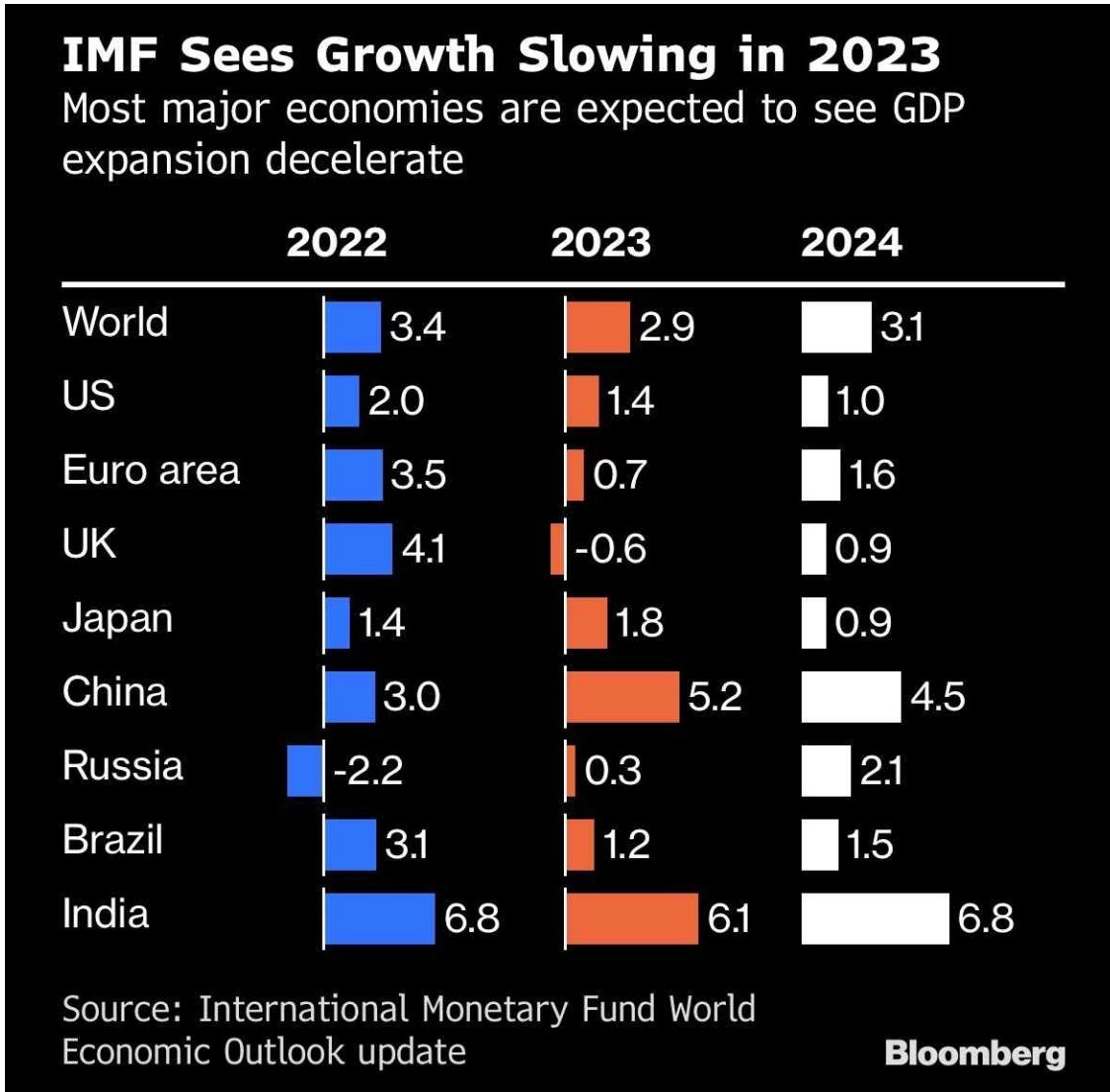
미 진보적 군사블로거 문오프알라바마 Moon of Alabama의 운영자b(버나드)는 이 보고서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OEM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설리번 안보보좌관 - 블린컨 국무장관 - 놀런드 국무차관으로 이어지는 미네오콘 라인업에 밀리가 패배한 후 이 보고서를 주문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안보보좌관 - 국무부로 연결되는 네오콘 라인업 대 미국 방부 '리얼리스트' 라인업과의 대결에서 전자가 바이든의 귀를 점령하고 난 뒤 나왔다는 말이다. 아마 바흐무트에서 우크가 대패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2) 네오콘과는 다른 전통적인 안보귀족을 대변해온 저 유명한 국제전략연구센터CSIS가 보고서를 냈다. 우크라전쟁으로 미국의 무기고가 비어가면서 주적인 중국과도 힘들게 되고 있다는 요지다. 고강도 장기통상전을 수행하기에 미 방산기반이 너무나 허약하다는 말이다.

(3) IMF가 연례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러경제는 0.3% 성장을 전망했다. 처음 전쟁이 나자 -20%를 전망했지만, 결과는 -2.3%, 이제 러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집단서방의 대

러 경제전쟁, 제재전쟁은 결론이 나왔다. 러의 2024년 전망치는 + 2.1%다. IMF 전망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평가를 반영한다.

<그림 4> IMF 2023년 경제성장 전망



3) 미국이 휴전을 간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노이에 쥐리시 자이퉁>의 우크 영토 20% 제안설, 즉 강대국권력정치의 전통적인, 오래된 공식인 20% '떼주기'에서 끝내자는 미측의 제안, 마찬가지로 아래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사, 그리고 이집트 외무장관을 메신저로 보내 러의 의사를 타진한 것등등 미 국무장관과 러시아내부에 정통한 현CIA국장의 움직임등등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이정도에서 마무리하자!'

2023년 1월 30일자 <더 크래들>지의 페페 에스코바 에 따르면 블링컨 미국무가 러측이 '도

저히 거부할 수 없는' 휴전안을 던졌다고 한다. 내용은 <워싱턴포스트> 지가 보도했다. 에스코바에 따르면 - 에스코바는 나도 즐겨보는 대표적인 다극주의 지정학 논객이다 - <뉴욕타임즈>는 미 국무부, <워싱턴포스트>는 미CIA와 깊은 유착관계인데 이 번 안은 후자가 보도했다. 이 안이 모스크바에 전달되는 시말은 나도 몇 번 포스팅한 워싱턴포스트지 모스크바 주재원인 존 헬머의 블로그를 보면 된다. (포스팅한 이 기사를 타고 들어가 Dances with Bears 의 존 헬머 기사를 함께 보든지 아니면 위 블로그를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다). 데이빗 이그나티우스라는 미국무성의 마우스피스를 통해 블링컨이 메시지를 푸틴, 러군수 뇌부, 국가안보위에 전달했다는 말이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대략 이렇다.

첫째, 크림, 돈바스2주, 헤르손, 자포로제와 크림 육로회랑에 대한 러의 통제권을 기정사실로 수용한다.

둘째, 우크라는 무장해제하고 하이마스, 레오파드, 에이브림스 전차등은 '러공격에 대한 억지책'으로 서우크라에만 한정한다.

셋째, 우크라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대신 나토조약5조에 상응하는 안전보장과 그 외 EU 회원국 지위를 갖는다.

넷째, 러는 동계공세를 중단한다.

러와의 직접 교전으로 인한 3차 대전으로의 확전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주요한 메시지다. 현재로서는 러 동계공세로 인해 우크라의 모든 기반시설이 완전히 파괴되고, 폴란드국경으로부터의 모든 보급로가 차단되며 특히 만에 하나 오테사가 함락되어 우크라가 완전 극빈의 내륙국으로 될 리스크보다는 현상status quo을 인정하고 여기서 타협하자는 의미로 봐도 되겠다.

에스코바의 해석은 블링컨이야 미네오콘 딥 스테이트의 메신저에 불과하니 만큼 문제는 이 딥스테이트가 패닉에 빠졌다는 말이다. 물밑으로 모종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야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니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할 이유는 없겠다. 그리고 전달된 메시지가 일견 현상인정 대 공세중단 그리고 대략 드네프로강 동서를 기준으로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안인데 이는 이전부터 사실 은밀히 주고받던 것이기도 하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문제는 러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미국을 '협정이행 능력이 없는 non-agreement capable' 국가라고 선언한 러가 현재 이기는 국면에서 다시금 어떤 합의를 시도할 것인가도 문제다.

그리고 이런 막후협상에서 당연히 우크라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강국과의 비밀협상에서 우크라와 같은 프락시는 끼워 주지 않는다. 그럴 이유도 없다. 이들이 얼마나 죽건 말건 그건 굳이 신경쓸 일도 아니다. 그리고 젤렌이 끝까지 버티면 그 뒤는 안봐도 뻔할 수순이다. 아무튼 추세적으로 미국의 합의안이 그나마 현실에 좀 더 다가선 것은 일단 평가할 대목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더 크다.

<그림 5> 우크라이나의 분할



3. 러시아의 반응

지금까지 러의 반응은 신통찮다. 공식적으로는 '설정된 목표를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목표란 무엇일까. 우크라이나 중립, 무장해제, 나치제거 등등이야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다. 중립이나 - 폭과 수준이야 다양하겠지만 - 무장해제는 군사적으로 강요하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면 나치제거도 가시권에 들어 온다. 게다가 우크의 네오나치중립파인 아조프는 처음 대대에서 연대를 거쳐 현재는 여단(우크지상군 제3 독립여단)으로 편성되어 바흐무트전선에 배치되어 있다. 바흐무트전투가 곧 나치제거인 국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외에도 아이다르, 크라켄등이 전선에 있다. 그 정치적 중심의 존재여부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이게 전부 아니다. 왜냐 하면 전후 러의 안전보장문제가 남아 있다. 이는 중립화를 통해 담보된다. 여기에 2021년 12월 러가 미국에게 요구한 안정보장안 특히 1997년 상태로 나토군을 재배치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를 군사적으로 강요하기 위해서는 나토가 더 '약화'되어야 한다. 즉 더 많은 무기를 포함 전략물자와 '환복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소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보자면 현재의 미국안 즉 우크라이나를 분할하고, 20%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미국영향권으로 확보하는 것은 러로선 수용불가로 보인다. 마치 한반도를 반으로 나눠 서로 나눠 먹듯이 하는 방식은 안 될 거라는 말이다. 현재까지

러의 개념으로 볼 때 우크라 전부를 점령하는 것도 또 우크라를 미국 즉 나토과 나눠 전선을 맞대는 것도 그들의 목표가 아닌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나토군은 어떤 형태든 우크라 영토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그림 5 참조)

아마 바호무트를 린치핀으로 하는 젤렌스키방어선이 붕괴되고 마지막 잘루즈니방어선에서 러군이 접근할 시점 (한달 - 한달 반 이후?) 북부든 남부든 새로운 전선이 열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즉 남은 우크군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 혹은 말살이 가능한 시점말이다.

4. 신세계질서와 ‘신냉전의 북소리’

현재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네오콘의 대리전 프로젝트는 실패가능성이 더 높아 졌다. 설사 ‘최후의 우크라이나인이 남을 때까지’ 싸우게 만들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전쟁을 통해 러의 ‘전략적 패배’를 강요한다는 네오콘 프로젝트의 좌절은 동시에 ‘신자유주의- 네오콘- 리버럴 (소위 ‘규칙기반’) 국제질서 - 단극체제’의 약화 혹은 균열의 다른 말이다. 이것이 내가 이 전쟁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다. 만약 지금의 전황추세가 이어져 러의 승리로 종결된다면 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대전환의 한 국면 혹은 ‘제1차 다극전쟁’이 마무리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다음 차수, 더 큰 전쟁의 향방마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 다음 전쟁이 열전이 아니라 냉전수준에서 장기 진행된다면 인류는 그저 ‘차가운 평화’속에서 공존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듯싶다.

얼마 전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일련의 드론공격에 대해 이란측에선 이스라엘과 우크라의 합동작전이라는 설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드론공습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서로 엇갈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기까진 좀 더 시간이 흘러야 겠다. 아무튼 우크라가 개입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서아시아의 긴장은 지금과는 다른 규모로 고조될 것이다. 러는 우크라, 중은 대만, 이란은 이스라엘, 이렇게 전국무장관 품페오는 작년 우크라, 대만, 이스라엘을 자유의 ‘3등대’라고 부르면서 이들 3국이 나쁜 나라 3국을 페어링해서 등불을 밝혀 줄 거라고 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불을 밝힐 차례일까. 그런데 나는 북한이 호명되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스럽다. 원래 러가 정리되면 아시아로 이동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만 우크라에서 발목이 잡혔다.

현재 이란산 드론의 원천기술은 아프간에서 노획된 미국산 드론이 이란으로 넘어간 데서 기인한 다는 설이 있다. 군사부문의 기술이전이 이런 식으로도 되는가 보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에이브럼스 전차의 우크라지원에 미국이 끝까지 반대했던 이유는 이 전차에 공급된 탄환이 열화우라늄탄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러시아에선 레오파드 전차의 포탄에 대해서는 경고가 나온 상태다. 즉 열화우라늄탄 사용시 이를 ‘더티 밤’에 의한 대리시아 ‘핵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은 핵공격에 대한 대응을 함축하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그 다음엔 뭐가 될 지 긴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나온 이 글보다 우크라 전선의 현상황을 간결하게 요약한 문장은 찾기 어려웠다.

“1. 러시아는 우크라전장에서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전장에서도 이기고 있다.

2. 시간은 러시아 편이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강조해 둘 것은 러시아의 동계공세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도 큰 화살big arrow (대규모기동전을 말한다-역자)공세는 내일 시작할 수도 혹은 아니면 아예 시작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내가 높게 평가하는 미군 퇴역 중령 버쉬닌이 말한 바 러가 물자나 훈련이 완성되는 3월 설은 아직도 유력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크라도 계속해서 춘계공세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8차 징병 - 엄밀히 징병이라기 보다는 노상납치 혹은 저인망식 검거작전같다. 뭐 그래도 6,000-10,000달러 내면 풀어준다고도 한다 - 으로 끌어 모은 인력과 서방의 전차지원(위 <표2> 참조)을 합쳐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현재 논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러군은 부분징병과 지원병등과 현재 전투중인 인원을 합하면 60만 정도다. 여기에 우크의 병력손실은 너무 크다. 이번 차수 징병인원까지 다 합해도 우크측은 글썽 60만은 어려울 거 같다. 이미 우크 총사령관은 자국 전투병력을 20만 정도라고 했다. 우크가 '승리'하고자 한다면 어렵잡아 1:3비율로 약 200만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이제 초등학생과 모든 여성, 60세이상 노인층까지 합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매체의 1월 29일자 기사에서 국제통상과 투자에서 달러지배에 대한 5가지 도전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는 데 제법 유용하다. 탈달러화 Dedollarization의 5가지 흐름은 이렇다.

1.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수르(Sur, 남)라는 공동통화를 창설, 유럽에서 유로화처럼 남미지역을 포괄하고자 한다.

2. 러시아와 이란이 금본위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을 결제통화로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양국의 목표는 국제결제시스템 스위프트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3.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는 2022년 FTA에서 석유이외 제품의 거래에서 루피화를 결제통화로 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역시 석유이외 무역에서 현지통화를 사용할 것을 고려중이다.

4. 중국은 러산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위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5. 러, 중은 2022년 브릭스국가내에서 새로운 준비통화를 개발하기로 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공은 자국 통화바스켓에 기반한 이 준비통화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의 패권 유지에 달러 리사이클링이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대미교역에서 발생한 흑자에 대해 중국, 일본, 한국등 흑자국은 미재무성채권을 달러를 지불하고 매

입한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지상최고의 안전자산이라 불리던 재무성채권을 판매함으로써 상당부분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미정부재정이 미군 사력유지에 지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제무역의 결제통화가 달러가 아니라 각국의 현지통화가 되면 이제 이러한 리사이클링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거나 큰 폭으로 축소될 것이다.

나토 사무총장이란 자가 한국엘 왔다. 나토라고 해 봐야 결정권이 브뤼셀이 아니라 워싱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미네오콘의 메신저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임기마치면 IMF에 일 자리 찾는다는 소문도 있지만 프랑스가 반대한다니 쉽지 않겠다. 온 이유는 글로벌 전차모으기 캠페인의 일환이다. 가뜰이나 미국쪽에서 진위를 전혀 알 수 없는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설을 퍼트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북이 러를 지원하니, 니들은 우크라를 지원하라는 말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은 냉전의 고아였다. 이제 신냉전의 최전방 소총수하라는 말로 들린다. 그래서 글로벌나토의 새시대적 소명을 받잡고 맨 앞줄에 서란다. 먼저 중국 <환구시보> 사설³⁾은 이렇게 말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14일 한국과 일본 순방을 시작했지만 그가 가지고 온 '선물'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그는 방한기간 동안 주로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이 “NATO와 대한민국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의혹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스톨텐베르크가 방문 전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NATO 동맹국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더 위험한 세계”라고 주장하면서 핵 억지력의 중요성에 대해 선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NATO의 기존 핵공유 메커니즘은 한반도 안보문제와 무관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언급해야만 그가 갑작스레 한반도에 등장한 모습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기에, 스톨텐베르크는 한국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및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즉, 한국을 NATO의 협력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핵 공유는 NATO의 영향력이 동북아까지 당당하게 확장될 수 있는 핑계일 뿐입니다.

매우 민감한 핵공유 문제에 대해 스톨텐베르크는 그의 공개 성명에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 두었지만 외부 세계는 일반적으로 그가 제안한 “정보 공유”가 NATO의 아시아 태평양 참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움직임은 미국을 본받아 활동영역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으로 한국 일부의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ATO는 지역방어 동맹으로서의 위상은 변함이 없다

3) “나토 한국에 핵미끼를 던지다”, <환구시보> 2023년 1월 31일자 사설.

고 주장하지만, 지난 해부터 계속해서 전통적인 자신의 방어지역을 벗어나 일본,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군사안보적 유대를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이제 스톨텐베르그는 동북아 지역에서 “핵 억지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교착상태와 NATO는 유라시아 냉전의 두 잔재지만, 전자는 냉전의 희생양이고 후자는 수혜자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NATO는 존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상실했지만 새로운 위기와 갈등으로 인한 긴장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장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나토가 한반도를 노리는 이유는 하이에나가 다른 동물의 피 흘리는 상처를 노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동북아에 가져온 것은 신냉전의 북소리입니다.”

요컨대 러의 승리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러 우세속에서 전쟁이 일정기간 더 연장되어, 휴전 또는 평화협정으로 끝날 경우,

첫째, 미국 주도 단극체제의 다극체제로의 이행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행의 폭과 속도는 러 승리의 규모와 강도에 비례할 것이다.

둘째, 유럽과 러시아의 ‘철의 장막’ 즉 디커플링으로 인해 유럽은 경제적 쇠퇴와 군사적 약화로 인해 미의 위성국 혹은 거대한 관광단지화할 지도 모른다.

셋째, ‘1차 다극전쟁’ 에 미국의 전력투사의 정도 즉 얼마나 필사적이고 존망적existential 인 가 그 정도에 따라 미국패권은 그 다음 단계 즉 대중국 전선으로 이행할 모멘텀을 확보하거나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중전선으로의 확전은 나토 즉 미국이 이 번 전쟁에서 충분한 규모로 승리하는 것과 밀접한 비례성을 나타낼 것이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미 패권은 더 빠른 속도로 해체의 길로 들어 설 수 있다.

넷째, 이 번 전쟁으로 인해 더욱 실체화하고 있는 지정학적 대전환의 중핵으로서 러-중-이란의 전략적 협력 혹은 ‘준’ 동맹관계는 다극 혹은 양/다극체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상하이협력기구, 사우디가 포함된 브릭스BRICS’ S’ , 유라시아프레임웍등이 미국을 역포위하고 인도가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복합적’ 다극체제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다극체제의 공동의 정치적, 경제적 ‘가치’ 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미패권하 단극체제가 신자유주의, 네오콘, ‘리버럴 데모크러시’ 를 표방해 온 만큼 이와는 구분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당장은 공존과 다양성 diversity 이상을 나로서는 말하기 어렵다.

여섯째, 1차 다극전쟁의 전말과 더불어 한반도는 빠르게 신냉전구도로 빨려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편으로 글로벌나토의 ‘전방소총수’ 로, 다른 한편으로 미본토 혹은 내지内地의 산업기지로 ‘동맹궁핍화’ 의 경로를 밟을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 이미 대중 디커플링의 효과로 인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와 지정학적 대전환의 충격으로 인한 가스, 전기등 기초재화의 초인플레이로 양극화의 심화와 ‘신빈곤’ 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대서양주의에 맞서 유라시아주의에 올라탄 북한이 새로운 지정학적 공간을 노리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철지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북핵의 ‘가격’ 이 급등하면서 그 어떤 대체재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이 시간이 갈수록 한국정치와 사회의 거대한 위기로 전환되면서, 어떤 사회세력도 여기에 다수가 합의 가능한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라 하겠다.

I 발제 2.

위기의 한반도, 평화 해법을 찾아

II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위기의 한반도, 평화 해법을 찾아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1

목 차

I. 서언

II. 위기 평가

III. 해법 찾기

1. 윤정부 '해법'의 문제 - 위기의 심화
2. 유일한 해법, 평화

IV. 결언

2

I. 서언

□ 위기 일반론

- ▲ 위기/위험/위협의 항존성
 - 생명체의 생존, 생육, 진화에 내재, '필요'
 - 국가/문명 공동체의 존속 과정에서 불가피 ('도전과 응전'을 통한 소멸/발전)
- ▲ 국가 위기의 다양성: 안보, 경제, 외교, 정치, 사회(분열, 갈등), 도덕(정신, 문화), ...
 - * 분야들 간의 연계 및 상호작용
- ▲ 위기의 크기와 시급성

□ 현상들은 '위기!'

--- 다양한 분야의 위기 고조, 본 토론에서는 '안보 위기' 중심 논의

3

II. 위기 평가 ...

□ 현 한반도 주요 위기

- ▲ 군사적 긴장고조, 충돌, 국지전 발발 위험
 -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확대, 강화
 - 북한의 강대강 맞대응 (미사일 시험 등), 한미의 재대응
- ▲ 전면전 또는 핵전쟁 비화 위험
 - 남한의 3축체계 (선제타격, 미사일방어, 대량보복/참수작전)
 - 북한의 핵무력운용 법제화 (핵 선제타격, 자동타격)
 -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적 수준 전개 (핵공격 가능)
- ▲ 대중, 대러 관계 적대화 위험
 - 남한의 미국 주도 대중 봉쇄 전략 및 '동맹체' 편입 (인태전략, 한미일 동맹화, QUAD, AUKUS, NATO 협력, ...)
 - 북한의 중러 밀착으로 신냉전적 대립구도 형성 가능성 (한미일 vs. 북중러)
 - 중러의 대한국 압력, 보복(안보, 경제) 증대 가능성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 초래 가능성 증대 !!

4

.. II. 위기 평가 ...

□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

▲ 질곡의 현대사: 일제, 분단, 전쟁, 독재

- 분단 유지, 정전체제, '전쟁 상태' 지속

▲ 강대국 정치에의 종속

- 강대국 간 대결, 전략적 이익 추구에 한반도의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의 위기 상황 '필요'
- 남한은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 북한은 중러의 존재가 필수불가결

▲ 남북관계의 과도한 정치화

- 보수, 진보 정부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른 대북정책, 국민들 사이 이념 갈등을 활용/조장하는 당파정치
- 민족통일 지향 일관적 대북정책 추진 거의 불가능

▲ 남북한 군비경쟁

- 군사안보 위주, 과도한 군사력/파괴무기(핵/재래식/첨단) 증강

한반도 위기 = 전쟁 위기 = 핵전쟁 위기
= 대량파괴, 민족공멸 '능력' 구비

5

.. II. 위기 평가

□ 한반도 위기의 '비용' (남한)

▲ 실제 전쟁 발발시

- 국지적 군사충돌: 국민 심리적 공황, 경제 충격,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보다 대북 적대감 압도, 위기 심화
- 전면전 발발 = 핵전쟁 = 국가 소멸, 민족 공멸

▲ 군사적 긴장 및 전쟁 가능성 증대 '과정' -- 막대한 기회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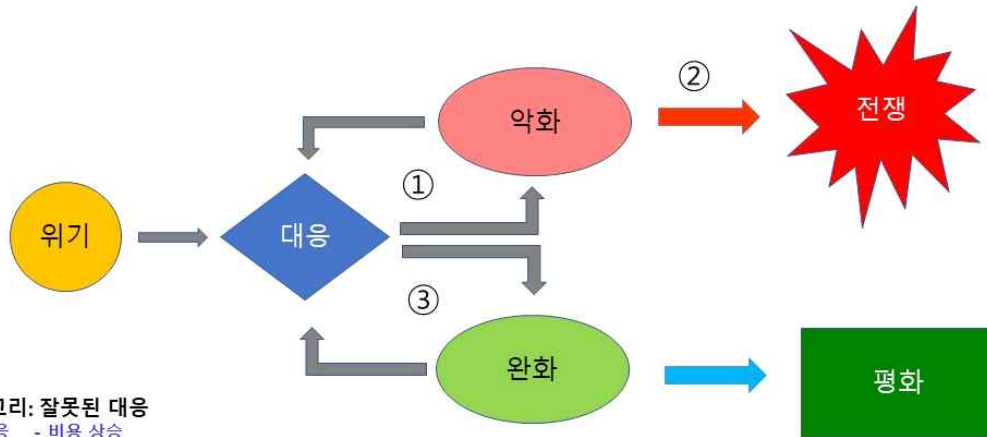
- 국민 심리적 불안, 이념 갈등, 정치 분열, '신냉전적 안보독재' 재출현
- 기업 경제활동 장애/위축, 군사비 증대, 민생경제 저해
- 대미 의존 구도 심화/고착 (작통권 환수 등 포기, 확장억제라는 이름의 '핵구걸', 국가주권/정책자율성 상실)
- 북중러 협력으로 중러의 위협 및 경제보복 증대 → 한국의 대미/대일 의존 심화
- 남북관계 단절 고착화, 분단/정전(전쟁) 체제 지속

전쟁 발발 → 국가 소멸
전쟁 위기 고조 → 후진국 전략 가능성

6

III. 해법 찾기 ...

□ 안보위기 대응의 성패 - 전쟁이나 평화냐?



- ① 악순환 고리: 잘못된 대응
 - 감내, 적응 - 비용 상승
- ② 전쟁
 - 전쟁 승리로 위기 종결 - 민족 공멸로 위기 소멸
- ③ 선순환 고리: 평화적 방법
 - 인내심, 자제력, 협상력 필요 *어려운 과업

7

.. III. 해법 찾기 .. 1. 윤석열행정부 '해법'의 문제점 - 위기의 심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의 중단/포기

- ▲ 윤대통령 후보 시절 드러난 냉전적 안보관
 - "대북 선제타격 가능, 919군사합의 비판, 평화선언 반대"
- ▲ '담대한 구상' (2022. 8. 15. 광복절 축사)
 - 북한 비핵화 전제,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정치군사적 상응조치, 과감하고 포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 > 북한 수용 불가, 남한 선도적/적극적 조치 부재 (북한의 반응: "전제 자체가 잘못, 인간 자체 싫다, 절대 상대하지 않을 것")

□ 한미동맹 기반의 '힘에 의한 안보' 추구

- ▲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강화로 북핵 억제/대응
 - 한미연합 군사훈련 강화(횡수/규모의 '정상화'/확대),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확장, NATO와의 군사협력 증진
 - 미군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
 - > 북한의 강대강 반응(핵무력 고도화, 운용 법제화/훈련), 핵전쟁 위험 증대
- ▲ 군사력 강화
 - 국방비 증액(2023년 57조원, 중기 330조원), 3축체계 강화, 첨단무기 지속 도입
 - > 북한 국방력 강화, 일본 방위비 증대(2023년 60조원, 5년 후 2배), 적기지 공격무기(미사일 등) 확보, 지역 군비경쟁 심화

8

.. III. 해법 찾기1. 윤석열행정부 '해법'의 문제점 - 위기의 심화..

□ 독자핵무장이라는 '망상' ...

- ▲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독자핵무장 지지
 - 단순 찬반 조사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비전문가 일반 국민의 '느낌' 수준
(북 미사일 시험에 대한 불안/공포, 핵주권, 핵보유국 자부심 기대)
 - * 위험성: 정치/정책에 영향, 안보 포퓰리즘 이용 가능성
- ▲ 윤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2탄?'
 - 2023.1.11. (국방부 업무보고시 언급), 북한 도발 수위 높아지면 “대한민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 미국의 즉각적 반대 의사 표명,
청와대와 국방부의 '본의가 아니다' 해명,
윤대통령 자신 “NPT체제를 존중한다”고 소명 (외신 인터뷰)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지지율 추이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 조사 이후 70% 안팎을 오르내리는 한국 국민들의 독자적 핵개발 지지율 여론조사 후, 아산정책연구원의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상황'에서의 독자적 핵무장 지지율이 70.2%로 나왔고 제재를 받는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현학술원 제고**

- ▲ 독자핵무장론의 심리
 - 군사안보 중심 사고 - 북과의 진정한 협상은 불가능
 - 미국 핵우산 불신 - '핵에는 핵' 고정관념

.. III. 해법 찾기1. 윤석열행정부 '해법'의 문제점 - 위기의 심화

.. □ 독자핵무장이라는 '망상' ...

- ▲ 독자핵무장론의 허구성
 -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사실에 근거한 공통된 인식: '실현불가능', '위험'
 - = 미국의 반대와 한미동맹 와해, 한반도 비핵화 포기, NPT 탈퇴와 외교적 고립,
핵발전소 연료 공급 중단과 전력 대란, 전반적 경제제재,
핵개발 비용과 핵시험 시설 마련,
재래식 분쟁의 핵전쟁 비화 위험성, 지역의 핵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 심화
 - 단 한 가지도 현실적으로 수용, 극복 불가능
- ▲ 여론 형성 자체의 문제점
 - 조사 결과가 여론 형성
 - 정치와 정책에 영향
 - * 안보 포퓰리즘에 이용 가능성

'만난'을 무릅쓰고 '핵무장한 대한민국'...?

① 국제적 인정 못 받는 '불량국가(rogue state)'
② 경제가 망가진 '실패국가(failed state)'

.. III. 해법 찾기 .. 2. 유일한 해법 - 평화..

□ 오래 전에 만들어진 최상의 해법들

-- 보수정권의 '자부심'

▲ 박정희 시대: 7·4 남북공동성명(1972)

-- '조국통일 3대 원칙': 자주적 해결, 평화적 방법, 민족적 대단결
→ 그대로 위기 해결의 원칙으로 채택 가능/필요

▲ 노태우 시대: 남북기본합의서(1992.2.19 발효)

-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기본 원칙들 명시, 실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
* '민족 대장전' → 각 조항을 그대로 실천하면 위기 해소, 소멸, 예방

▲ 김영삼 시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8.15. 제안)

-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으로서 현재까지 계승
- 3단계 통일 방안: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
→ 당장에 1단계 적극 추진으로 위기 해소, 중장기 전략으로 남북연합 단계 설계 필요

※ 위 3개 문서는 이후 진보정권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기초 제공

11

.. III. 해법 찾기2. 유일한 해법 - 평화..

□ 왜 실패했는가? - 정치적 성찰 필요

▲ 보수정부

: 박정희-노태우-김영삼 업적 '무시'

- 대북 인식: 합의의 파기, 군사(핵)위협, 대화 진정성 부재, 변함없이 '악마'
- 미국의 지역/세계 전략에 협조, 대미의존 체질화
- 국내 보수세력과 여론에 편승/이용

▲ 진보정부

: 박-노-김 정책 계승발전 노력

- 대북 인식: 보수정부에 비해 유화적, 군사(핵)위협 대비하되 남북대화협력 추구
- 미국과 보수세력 '눈치보기'로 과감한 '실천' 주저/유예/포기

*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과오/업보

: 합의의 실천을 통한 남북관계의 CVID (CVI Development) 성과 달성 실패
-> 정권교체 후 완전 부정 반복

12

.. III. 해법 찾기2. 유일한 해법 - 평화..

□ 한반도 전쟁위기의 유일한 해법 -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 실현..

▲ 위기 대응 원칙: 7·4남북공동성명 정신 계승

-- 박정희 전체의 계승 아님, 이상적이면서 이성적/현실적임.

① 자주

- 주변 어떠한 국가도 한반도 평화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 운명의 주인, 위기의 당사자로서 정책 자율성 발휘, 국가의 생존권/자주권은 가장 보편적 기본 권리

② 평화적 방법과 수단 사용

- 평화 이외의 다른 방법 무의미 → 전쟁 위험 제거, 군사적 긴장 완화 우선 고려

③ 남북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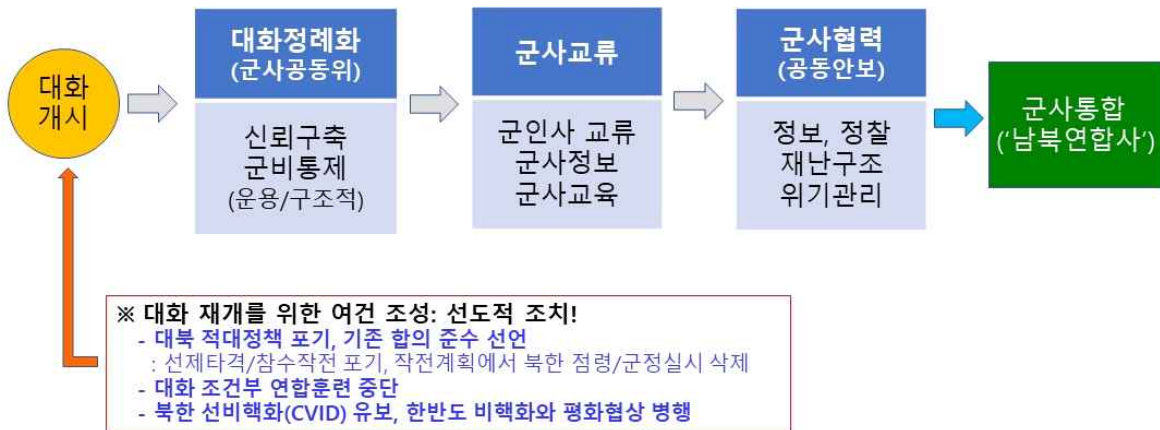
- 남과 북이 함께 위기의 당사자, 운명의 주인
- 자주와 평화 원칙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13

.. III. 해법 찾기2. 유일한 해법 - 평화

□ 한반도 전쟁위기의 유일한 해법 -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 실현

▲ 평화 해법 로드맵(정치군사 분야)



14

IV. 결 언

□ 암울한 전망

▲ 2022년은 한반도 전쟁위기 '원년'

: 윤정부 대북정책 + 미국의 전략 +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확대

vs.

북한 핵무력 강화

▲ 2023년부터 본격적 위기 고조 가능성: 남북미 정부 정책변화 요인 부재, 전쟁위기와 함께 찾아오는 봄

□ 소망적 전망

▲ 1순위: 윤석열정부가 평화 해법 채택

▲ 2순위: 윤정부 기간 중 전쟁 부재, 위기비용 감내

▲ 3순위: 윤정부 기간 중 전쟁 부재

우리의 소원은 평화!!

/끝/

15

| 토론 1

||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2023년 정세전망과 대응방향

손정목 |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1. 2023년 세계질서의 본격적 전환기

1) 시대의 성격

- 시대의 성격 : 미 패권 몰락기이자 다극화 세계질서로의 전환기. 다극화 실현은 호혜와 평등의 세계 질서. 호혜와 평등의 세계질서는 자주와 주권국가를 전제. 이런 의미에서 다극화 세계질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관계가 사라지는 자주와 주권강화의 새 시대이자 인류의 오랜 염원인 호혜와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진보적 전진. 구 냉전이 사회주의대 자본주의라는 체제대결로서의 성격이었다면 소위 신 냉전은 주권국가 연합대 미 패권 동맹연합과의 대결. 곧 자주인가 예속인가의 대결.

- 빠르게 진전되는 다극화 세계질서

① 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리던 중남미 거의 전역에서 반미, 탈미적 자주적 진보정권이 출현하여 중러와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브릭스 플러스, 상하이협력기구 가입 신청은 물론 달러를 대체하는 독자화폐 준비.

② 중동의 사우디를 비롯한 친미걸프국가들이 자주적 입장을 세워 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브릭스 플러스,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을 신청한 것은 물론 석유거래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합의.

③ 아프리카 국가들이 탈미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남아공은 중러와 연합군사훈련을 발표. 또 인도, 파키스탄이 중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하이협력기구 가입. 그 결과 브릭스플러스 13개국, 상하이협력기구 26개국 참가신청(22년 기준) / 13개국 반패권연합군 공동훈련 (2022. 9 보스토크 합동군사훈련)

④ 브릭스 5개국 화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자원본위 디지털 기축통화 준비(가칭R5+)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연합이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체제 대체 과정.

--> 이러한 현상은 이들 신흥국(global south)들이 미국의 대러 제재 압박과 중러 비난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자주적으로 미 패권적 간섭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줌.

--> 다극화세계질서는 30년 이상 미 일극패권 하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된 미국의 침략과 전쟁, 전횡과 횡포를 끝내는 시대로, 더 이상 한 나라의 예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주권국가들의 시대.

--> 현재의 세계정세를 미중패권경쟁으로 보는 시각은 지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영미패권전환기처럼 바라보는 구시대적 관점. 세계질서 전환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 이전여부를 다투는 과정이 아닌 아예 패권을 없애는 전환. 일각에서는 미중대결을 패권주의와 팽창주의 대결이라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식의 양비론을 주장하나, 이는 세계질서 전환의 진보적 성격을 가리고 미 패권을 무너뜨리는 세계사적 의의를 왜곡하는 것. 또한 자주와 주권강화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함.

현재의 세기적 대결은 미 일극패권이 유지되는가 아니면 다극화로 전환되는가의 판가리적 성격.

2) 소위 신냉전의 본질

- 유럽과 동북아 동맹을 내세워 북중러 대결전선을 구축하면서, 내적으로는 동맹의 생산력과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시켜 공동화된 자국의 생산력과 군사력 복원 추진하는 장기전 전략. 동맹 피폐화와 자국 이기주의. IRA, CHIP4 동맹 등. 신냉전 전략의 본질. 이에 따른 각국 민중의 반발을 진압하고, 위기에 처한 각국 친미지배세력 지위 유지와 미국 요구 수용을 위해 유럽, 한국 등 친미정부들의 파쇼화 경향.

- 미 랜드 연구소 보고서 (미 국방부 연계) : 제목 “독일을 약체화시켜, 미국을 강화한다“ (22.1) ‘미국은 전쟁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계획했는가? (스웨덴 ‘니아 다그블라데트 (Nya Dagbladet)’, 22.9.15)

: ‘분쟁 전에 우크라이나가 추구하던 공격적인 외교정책에 의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제 목적은, 이미 준비된 대리시아 제재를 유럽이 널리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것’ . / 독리분리/ 독일의 환경운동은, 광신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독단적인 운동. 이들이 경제적 논리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

-> 대러 가스, 원유제재 시행. 최종적으로 유럽 경제는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은 바람직. 미 \$9조(9,200조원) 이익 예측. 그 결과 유럽의 고학력 젊은이들이 이민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 이 보고서는 미국이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음을 보여줌.

- 이렇듯 우크라이나전쟁은 미국이 패권위기 상황에서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동맹경제력을 자국으로 이 전시키기 위해 기획한 대리전.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의 침략위협에 대응한 주권국가 최초의 반격전으로 세계질서전환의 변곡점.

① 나토가 2014년부터 러시아와의 전쟁준비를 위해 병력배치와 예산지출 늘려왔다
(존 스톨텐베르그, 나토정상회의. 22.6)

② 우크라이나전의 패배는 나토의 패배. 장기전 준비해야 한다. (존 스톨텐베르그, 22. 10 나토국방장관 회의)

③ 민스크협정은 평화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무장을 위한 시간벌기
(메르켈 전 총리. 22.11. 슈피겔인터뷰)

④ 우크라이나 승리 불가. 평화협상 시작해야 (마크밀리 미 합참의장. 22.11)

⑤ 미국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 20% 할양 평화협상 제안 (23.2)- 젤린스키 정부는 없다.

->dl 사례는 우크라이나전쟁이 젤린스키정부는 없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쟁임을 알 수 있음.

3) 2023년 예견되는 주요 전환적 상황.

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 승리 확정적. 그러나 미, 유럽의 전쟁지속 의지. 탱크지원 비롯 전투기, 미사일 지원 거론. 폴란드의 영토 야심. 우크라이나 서부 합병 추진 등으로 전쟁 지속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는 바이든 정부 대선 패배, 나토 해체 시발점.

② 미 동맹경제 스테그플레이션. 고물가, 고금리 미 동맹국 경제 침체 심화. 미국 역시 군사, 석유, 가스 산업 위주 호황이나 기타 산업 불황. 금리 상승으로 국가부채 증가일로. 금융산업 위기로 파생상품 시장 위기 심화

③ 브릭스 신 기축통화 출현. 다극화 진영은 자국 화폐와 새 기축통화 사용 증대. 달러사용 배제될 것.

사우디 등 중동 원유 위엔화 결제 확대. 달러체제 근본 위기 심화. 중, 인도, 러시아 경제성장 지속인 반면 미, 유럽, 한국등은 경기 침체.

④ 대서양 동맹 해체 진행. 튀르키예 나토 탈퇴 거론. 헝가리, 이탈리아 러시아 제재반대. 유럽 고금리, 고물가로 기업도산, 실업증가, 민중항쟁 확대 등으로 중남미에 이어 정권 교체 가능성 고조. 주권강화 추구하는 보수정권 등장 가능성. 독프 등 유럽국들 중러관계 정상화 시도.

--> 미국의 군사적 열세, 달러체제 위기심화, 대서양 동맹 해체 진행 등 미국 패권질서 더욱 약화 전망.

2. 한반도 정세전망과 대응 방향

1) 한반도 전쟁위기의 원인.

-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북미 양비론 역시 위기의 본질을 가리고 해결전망을 바로 세울 수 없음. 미중, 미러 양비론과 같은 맥락.
- 한반도 전쟁위기는 미국이 길게는 1958년부터 정전협정을 깨고 전술핵무력을 한국에 들여와 북에 핵 위협을 가한 데서부터, 짧게는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를 깨고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대북제재를 강화한데서 비롯된 사태.
- 북은 트럼프정권과 합의한 대로 핵과 ICBM 시험을 4년여간 중단하고 기다렸으나,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제재 강화 등 적대정책을 강화.
- 현재의 전쟁위기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핵전략자산 투입등 핵공격 위협을 보다 강화하고, 유럽 8개국을 끌어들이는 연합훈련을 강화함은 물론 일본 군사대국화 추진, 선제타격, 확산불사 등 윤석열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이 더욱 강화된 결과.
- 한국 정부와 언론은 북이 핵 미사일 시험을 강화하여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방어적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한다는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주장 하고 있음. 미국의 조건없는 대화 주장 역시 자신들의 약속위반 책임을 덮으려는 기만책.
- 북미 양비론 또한 전쟁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흐리게 하고 미국의 근본적 책임을 덮어주는 주장. 양비론대로 나아가면 그 해결책은 미국과 동시에 북도 핵을 내려놓으라는 주장으로 이어짐. 그러나 미국이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북도 비핵화 하지 않아 대결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 양비론은 분단유지, 미 지배유지 의미. 한반도 문제 해결원칙이 될 수 없음.

2) 전쟁위기 해결 방안

- 해결방안은 위기의 원인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는 것.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면 북 또한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할 것. 이 방안은 이미 미 외교협회(CFR) 회장 리차드 하스에 의해 제기된 바 있음. 그는 지난 해 대북제재 해제와 핵군축 제안.(22.10)
- 핵군축은 북미 양국의 상호 인정 전제. 즉 수교하여 평화공존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단계적 핵군축을 실현해 나가는 것. 이미 미소간에 사례.
- 싱가포르공동성명은 그 1항에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을 밝혀 수교를 먼저 할 것임을 밝힘. 2항에 평화협정으로 대표되는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3항에 완전한 한반도비핵화를 합의 한 것은 북미간 신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든 다음 양측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의미. 이때의 비핵화는 핵군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 당면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일부라도 해제한다면 바로 해소될 것임.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북미간에는 바로 평화협상 가능할 것.

- 진보진영은 이런 이유로 전쟁반대만이 아니라 한미, 한미일연합훈련 중단, 미 전쟁무기 도입 반대 등을 요구해야 함.

3) 2023년 한반도 정세전망과 대응방향

① 현상유지 - 대결정세의 지속

한반도 긴장 고조 유지되면서 윤정권 파쇼화 강화. 개헌을 포함한 친미여야세력들의 담합에 의한 장기 집권 도모. 개헌 추진. 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힘의 친위대화, 민주당 분열, 노동, 진보 공안탄압 강화 등을 통한 반대진영 약화와 교육 개악 등을 통한 반복, 친미이데올로기 강화 추진.

윤정권은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민생위기와 국민 분노를 전쟁위기 고조로 덮으려 할 것. 그러나 이런 긴장유지 전략은 지속 불가. 미국과 윤정권의 대북적대정책 강화된다면 군사대결 불가피.

② 전쟁위기 정세의 격화

북은 준비된 군사력으로 한미의 적대적 군사 활동 중단시키려 할 것. 이 과정이 격해지면 부분적, 국지적 충돌 가능성. 크건 작건 군사충돌 발생할 경우 전방위 급속 확산 가능성. 미국은 전면전인가 평화협정 협상으로 전환인가 선택지점에 서게 될 것.

③ 평화협정 협상으로서의 전환적 국면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북의 강대강 대응과 남측 민중의 반전반윤 투쟁 결과 미국 태도 변화. 이미 미국 조야에서 북과 핵군축을 비롯한 평화협상 제기.

※. 미국의 태도변화 가능성 (2022년)

- 제프리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비확산센터 국장 : 북 핵보유 현실로 수용할 때. NYT 기고
- 제니 타운 스티븐슨센터 선임연구원 ‘파이낸셜타임스’ : “비핵화 기회의 창은 이미 닫혔다”
- 리차드 하스 CFR회장 (10.19) : 제제 해제. 핵군축.
- 블룸버그통신(10.23) ‘서방의 실패: 북은 핵보유국’ 제목 : 미정부 포기해야 할 정책은 북 비핵화.
-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북과 군축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 (10.27)

--> 어떤 경우든 전후 최고의 격변 정세. 2023년 평화협정인가 전면전인가 변곡점. 비상한 시기 비상한 대응 요구.

--> 전쟁은 모든 것을 물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를 어떻게든 막아야 함. 범국민적 반전반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투쟁 요구.

I 토론 2

II 원진욱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

반미자주 없이는 민생도 평화도 통일도 없다.

- 2023년 통일운동과제

원진욱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들어가며 -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 관점

역사적인 사회운동은 올바른 좌표와 이정표가 있을 때 우여곡절을 최소화하고 편향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핵보유의 불균등성으로 인해 한반도에 일방적인 핵전쟁위협이 강요되던 시기에는 반핵이 곧 반전평화였으며, 반미반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위협은 북의 핵무력완성을 초래하였다. 북미간의 핵보유 불균등성은 미국 스스로가 깨버린 것이다. 전쟁억지력이자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북의 핵무력은 초강대국 미국과의 세기적 담판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북미핵담판시대에 이르러 반핵과 평화군축은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의 역사적 근원과 과정을 옳게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반핵이 곧 반전평화인 것처럼 교조적으로 받아들일 위험성을 갖게 된다. 역사와 현실정세를 간과한 채 반핵=평화, 군축=반전평화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한반도의 근본문제가 마치 핵문제인 것처럼 호도되고, 미국의 민족적대분열정책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중전선언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마찬가지로이다. 정전협정을 중전선언으로 전환시키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 또한 미국의 한반도 지배와 간섭이 초범적이고 일방적으로 자행되는 조건에서는 사실상 공리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 양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반미반제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이다. 한반도 군사적 충돌의 근본 원인을 간과한 채 정세가 격화된다고 해서 반전평화 또는 평화군축을 해법으로 앞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세대응에 혼란을 주고 필연적으로 대중운동의 통일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대결구도와 통일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대중화의 출발점이다. 대중화란 대중 자신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 들이게 한다는 것이다. 표현을 순화하거나 수위를 낮춘다고 해서 대중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반미없이 평화없고, 반미없이 반전없으며, 반미없이 민생도 없고, 반미없이 통일도 없다. 우리가 들고 갈 시대의 좌표이자 실천의 기준은 오직 반미자주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는 서로 구분되면서도 연관되어 있다.

1) 우리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단되기 전부터 민족문제는 존재해 왔다. 민족문제란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가깝게는 한반도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 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열강들간의 다툼이 극심해지던 19세기말부터 한반도의 자주권문제는 안으로는 봉건사대통치를 혁파하고 갑오농민항쟁 등에서 나타난 민중들의 반봉건 민주개혁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문제였고, 밖으로는 외세의 약탈지배주의로부터 국권을 수호하는 과제로 나타났다.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는 정치적 자주권과 이를 수호할 자주적 역량을 갖는 것이야말로 민중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웅변해주고 있다.

2) 통일문제는 외세를 몰아내고 전국적으로 민족자주권을 쟁취하는 것을 말한다. 2000년대 들어 통일문제는 6.15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공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자주적으로 평화번영통일국가를 수립하면 해결되는 것이었다.

이남의 기득권지배세력들은 정치경제군사 등의 주권을 미국에 내주고 오로지 미국만이 최고의 가치요 절대 선이라는 맹목적 사대주의를 자신의 생명줄이자 정체성으로 여기며, 세뇌와 강권을 통해 자신들만의 지배체제를 유지해 왔다.

참담한 연속적 굴레를 극복할 정치적 역량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중들은 치열한 투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민주개혁을 이룰 수 없었으며,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유일무이한 이정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3) 민족문제는 통일이 실현되더라도 제국주의와 사대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족의 자주적 발전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족의 자주권을 더 강화하고 올바른 민족시책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회기풍을 굳건히 세우는 과제를 항상 갖게 된다.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요구하는 본질적 문제는 무엇인가

1)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은 제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므로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는 동시에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통일과 반통일의 계선은 우리민족대 미국 및 반통일세력과의 대결구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북공동선언은 자주와 애국, 예속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 되었다.

2) 6.15남북공동선언은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에서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한데 이어 2018년 9.19평양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다시 요약하면 역대 남북공동합의의 핵심은 서로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자주의 원칙아래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선비핵화’, ‘비핵화와 남북대화 속도조절’, ‘전략적 인내’ 등을 내세운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적대정책과 통일방해로 인해 모든 합의이행들이 좌절되고 말았다.

지난 과정은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근본적인 관계개선으로 전환하려면 적대정책과 핵 및 미사일 개발·시험 등에 대한 미국식 이중기준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일방적 핵전쟁위협의 비대칭적 상황을 종식하고 미국의 패권과 민족분열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북미대결의 새로운 국면, 즉 북미핵담판시대를 열어내었다.

반미없이 평화없고, 반미없이 통일없다.

진보진영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핵과 군축문제는 북미대결의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며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구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본질적 과제가 아니다.

북미대결과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에서 역사적이며 본질적인 문제는 민족적대와 이북정

권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일극 패권지배전략을 우리민족의 힘으로 배격하는 문제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전제이며 관건적인 과제다.

북미대결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 이른바 ‘북핵’ 문제와 군축문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초래한 자업자득의 결과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확장억제전략강화는 미국의 본토안전과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과 함께 미국의 반중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전초기지요 발진기지로 전략시켜 버린 것이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본질이다.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근본관계 개선(=한반도 지배를 위한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없이 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화군축 주장의 현실성과 정당성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철저히 반미를 관통하지 않는 한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군축을 이남지역의 대중운동의 실천과제로 내세운다는 것은 최종단계에 이른 북미대결의 정세인식에 대한 오류일 뿐만 아니라 정세와 동떨어진 실천을 낳고 만다.

우리가 당면해서 직시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반미자주 통일투쟁이어야 함에도 평화군축을 들고 나가는 것은 한반도문제의 역사성과 그 근원을 간과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는 반미로 시작해서 반미로 종결되어야 하며, 군축은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와 평화협정 이후에 상호신뢰와 핵위협이 근간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한반도정세에서 기본과제는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다. 통일은 외세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는 우리민족의 역량이 압도적일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

반미자주운동은 남북해외가 굳게 손잡고 나서야 하는 우리민족 공동의 실천과제

정세의 흐름은 이남의 반미운동과 북미대결이 뚜렷한 하나의 종착점으로 모아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착점은 바로 민족자주 반전평화 조국통일이라는 역사적 귀결을 말한다.

평화를 공고히 하고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는데서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결의 자체가 이미 반미운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족적인 운동의 성격과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2022년 7.27과 8.15를 계기로 각계층이 남북해외의 공동호소문과 공동결의문을 통해 민족자주통일대행진의 굳은 결의들을 모아 내었으며, 향후 더 광범위하고 더 체계적이며 더 일상적인 민족자주 반전평화 조국통일 투쟁을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다.

민족대단결은 자주와 통일을 위한 우리민족 승리의 비결

예측불가능하며 극단적으로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 정세에서 2023년 거족적 통일운동의 방향은

첫째,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온 민족의 힘을 모아내자(= 민족자주와 대단결)는 것,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일외세와 반민족전쟁세력을 배격하고 몰아내자(= 조국통일과 평화체제에 기여하는 반미반일반운)는 것,
셋째, 현 정세를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결정적 국면으로 전환시키자(= 모든 것을 조국통일로 귀결시키자)라는 세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민족자주와 대단결로 반민족전쟁세력 몰아내고 자주통일의 획기적 정세를 열어내자!>로 하자는 것이다.

2023년 미일외세와 반통일전쟁세력이 자행하는 긴장고조와 군사적 기도를 파탄내고 자주통일정세로 대전환시키기 위한 관건적 문제는 <동원>문제다.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호소와 쫓기는 정의와 양심세력이 누구인가를,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파괴하고 이 땅을 영구적인 분단예속의 땅으로 만들려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어떠한 기만술수와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주와 통일의 시대로 가려는 통일애국세력의 의지가 얼마나 강고한지를 보여 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다.

<동원>하지 않고서는 투쟁전선도 단결전선도 만들 수 없으며, <동원>하지 않고서는 대중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

2023년 <동원>문제는 두 갈래이다. 하나는 민족공동투쟁으로 동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측의 반미전선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과의 투쟁에서 노동자의 결정적 힘은 <총파업>투쟁에서 가장 힘있게 나타난다. 총파업투쟁이 노동자의 총단결총투쟁전선인 것처럼 민족공동투쟁은 내외반민족분단전쟁세력과 별이는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투쟁전선이다.

전쟁과 분단, 간섭과 지배를 일삼는 세력을 몰아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힘은 자주통일을 바라는 남북해외의 모든 민족역량의 단합과 공동투쟁이다.

지금 정세는 모든 적대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며, 북미 상호안전보장문제를 최종담보로 한 평화체제구축을 둘러싼 마지막 대결단계이다. 이 말은 종전선언 촉구, 북미 상호자제 요구 등은 빛나간 화살이다. 과녁을 잘 보지 않으면 명중시킬 수 없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지금 정세에서 우리민족이 공동으로 외치고 힘을 모아야 할 지점은 <민족자주와 대단결

로 반민족전쟁세력 몰아내고 자주통일의 획기적 정세를 열어 내자!>는 것이어야 한다.

나오며

외세의 지배간섭과 적대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분단된 나라의 친미예속정권하에서 노동·민생·평화 등의 문제해결은 민족적이며 역사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하고 가장 많은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아직도 평화수호세력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들은 여지없이 ‘악의 축’으로 취급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의 북비핵화는 실패했다. 북의 핵무기를 받아 들일 때가 되었고,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노동자와 민족의 운명은 하나이며 반미없이 민생없고, 반미없이 정치경제군사의 자주화는 있을 수 없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반미를 놓지 말아야 하며, 목표가 무엇이든 이 땅에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여하자면 모든 것을 반미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과 한반도 평화실현은 반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와 대단결로 힘을 합쳐 나갈 때 비로소 실현된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 북의 주요 발표> (정리 : 범민련 남측본부)

미국이 대화와 위협을 오락가락하며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자, 북은 2009년 1월 7일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핵 억제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조선반도의 현실이다...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철두철미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조미관계정상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지키기 위한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내게 되었다.

2010년 1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자주권을 계속 침해당하면서 자주권을 침해하는 나라들과 마주 앉아 바로 그 자주권 수호를 위해 보유한 억제력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미국측 사정을 고려해 6자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선행시키는 노력을 6년 이상 기울였지만 평화협정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앞서 비핵화를 진척시키는 방식은 실패로 끝난 것이며, 신뢰없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실천경험이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2005년 2월 핵무기보유를 선언하고 핵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한반도비핵화의 전망에 대한 원칙적 입장은 2013년 1월 24일 북의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선명하게 나타났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위협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상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비핵화실현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을 비롯한 온갖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며 그것을 안받침하고 있는 미국의 방대한 핵무력이다.

따라서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해나갈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있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찾은 최종결론이다.

앞으로 조선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어도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상정되는 대화는 더는 없게 될 것이다.”

미국 비핵화와 세계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북의 모든 핵폐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네오콘들에 의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은 결렬되고 만다.

뭐라도 할 것 같았던 기대가 깨지자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10월 스웨덴 실무 접촉에서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15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 고 밝히게 된다.

7차 당대회(2016. 5)와 8차 당대회(2021.1)에서 연이어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 고 밝힘으로써 그간 기만과 빈말로 반복되었던 대미협상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입장에 기초한 한반도 군축의 사명> (정리:범민련 남측본부)

첫째, 한반도 군축은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전제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즉, 한반도 군축은 통일을 전제로 하는 군축이어야 한다. 때문에 한반도 군축은 분단고착으로 이어 지는 어떠한 요소도 철저히 경계, 배격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군축의 평화적 사명이다.

둘째, 미군철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군축은 실제적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화되고, 분단영구화 전략이 공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미군철수를 이루는 것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평화협정 또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북미평화협정은 미군철수문제, 무력불사용문제, 군비증강과 군비경쟁중지문제, 외국군사기지철폐문제, 미국의 내정불간섭문제 등을 포함한다.

미국은 이남을 미본토안전과 중국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핵우산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미국의 핵위협제거는 한반도 비핵화실현의 초기목표인 동시에 비핵화 실현의 기본조건이다.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는 조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I 토론 3

II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

전국민중행동 토론회 ‘신냉전 대결과 다극화로 향하는 세계, 한반도 평화의 과제’ 토론문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

1. 이해영 교수의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에 대한 의견

1) 전쟁의 원인에 관해서: 이 글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나토 확대를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널리 퍼진 시각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2008년 미국 부시 행정부 당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토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말로는 가입을 받아들여, 실천적으로는 가입을 거부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독일, 프랑스가 반대했고, 나토는 회원국가가 만장일치로 찬성하지 않는 새로운 가입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러시아의 국내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푸틴의 권위주의와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개시된 크림반도 점령에 전쟁의 기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러시아가 느꼈던 외부적 위협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나토 확대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주변국 정치에 개입하는 현실에 저항하며 민주적 체제를 구축하려는 주변국 민중의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2) 러시아의 전쟁승리/우세가 미 패권 하의 단극체제를 공존과 다양성의 다극체제로 이끌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이번 전쟁의 경우, 만약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유엔의 집단안보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할 사례였다고 봅니다. (1조, “UN은...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42조,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등.) 국제평화를 유지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도리어 명백히 국제평화라는 정신을 파괴하며, 유엔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강력한 규탄 대상이 되며 (이는 미국의 이라크전쟁과 비견할 만한 일입니다), 러시아의 승리/우세는 강대국은 유엔을 무시해도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는다는 위협천만한 교훈만을 남길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이고, 대외적으로는 노골적으로 팽창주의적인 러시아가 주도력을 행사하는 ‘다극체제’가 어떻게 공존과 다양성이라는 말과 짝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3) 서방의 개입에 대하여: 발표문에서 인용하신 것처럼, 저도 미국과 서방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의도를 결코 ‘나이프’ 하게 보아서는 안 되고, (네오콘이든, 리버럴이든) 각자 나름대로 설정한 목표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의지를 꺾어버리는 안 되고, 우크라이나 민중이 그저 서방의 대리인(proxy)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둔 시점에 조선과 같은 (패전국의) 식민지를 독립시킨다는 영국, 미국, 소련, 중국 등 강대국의 합의를 나이브하게 보아서는 안 되고 (순수한 인간애의 발로라든지 등등), 각국의 국익에 따른 냉철한 계산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에 완전히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식민지 민중의 해방운동이 강대국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던가, 그래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가,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서방의 의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국제적 민중연대’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운동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의 사회운동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과의 국제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 문장렬 교수님의 ‘위기의 한반도, 평화 해법을 찾아’ 에 대한 질문과 의견

1) (PPT 10쪽) ‘만난’ 을 무릅쓰고 ‘핵무장한 대한민국’ 은 ①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는 ‘불량국가’ (rogue state)’ 이자 ② 경제가 망가진 ‘실패국가’ (failed state)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핵무장한 북한’은 ①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는 ‘불량국가’(rogue state)이자 ② 경제가 망가진 ‘실패국가’(failed state)라는 규정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며,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불량국가, 실패국가라는 처지를 끝내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는지요?

2) (PPT 11쪽) 보수정권에 의해, 오래 전에 만들어진 최상의 해법 중 하나로 노태우 시대의 남북기본합의서(1992. 2. 19. 발효)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역시 동의합니다.

→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와 짝을 이루는 게 (역시 1992년 2월 19일에 함께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인데, 이를 ‘최상의 해법’에서 함께 언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서명, 발효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한반도비핵화선언’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수한다고 발표하고 (1991.9),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1991.11.)한 데 이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비핵화를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탈냉전으로 가는 입구를 열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비핵화선언이 함께 있어야만 남북기본합의서가 합의되고 작동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지, 한반도비핵화선언 없이 남북기본합의서만 합의, 작동될

수는 없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봅니다.

3) (PPT 12쪽) 오래 전에 만들어진 최상의 해법이 실패한 이유가, 보수정부는 박정희-노태우-김영삼의 업적을 무시했고, 진보정부는 이를 계승·발전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과감한 실천을 주저, 유예,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흐름이 단순히 남한 정부의 성격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 굴곡을 겪었다는 식으로 문제를 단순화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이 실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네바합의나 6자회담에 따라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진척과 남북관계의 탈냉전화가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말입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남북관계의 완전한 동결은 6자회담 프로세스의 좌초와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6자회담 프로세스가 좌초된 원인이 무엇이나를 두고도 여러 주장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비핵화 검증에 대한 북한의 거부가 중대한 요인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정부가 남북관계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기 전에 비핵 임기 말에 거둔 성과가 미미한 이유가 단순히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실천을 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 발표자께서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실천을 해야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유엔 제재라는 객관적 조건 속에서 어떤 실천이 가능했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4) (PPT 15쪽) 대화 재개를 위한 여전 구성에 ‘북한 선비핵화(CVID) 유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의 유보가 의미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동결이나 부분적인 핵감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이게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북한식 조선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노딜’을 통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미국의 외교정책 원칙일 뿐만 아니라, 유엔과 NPT(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체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비핵화는 현실에서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지만,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고,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신고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폐기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상을 병행’ 하자는 것이라면, 이는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핵동결, (부분적) 핵감축 협상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수용한다면, 곧 NPT 체제가 붕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북한식 '조선반도 비핵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북에 보낸다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시나리오를 북한이 실현할 수 있다는 북한의 그릇된 믿음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NPT 체제의 원리를 벗어나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북쪽에 심어주는 행위는 곧 북한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교수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불량국가', '실패한 국가'로 남아있게 할 효과만을 발휘할 따름이라고 봅니다.

5) 결론적으로, 우리는 남한의 핵훈련이나 전술핵 배치 논의를 비판할 때,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나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은 명백하게 남측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핵무기는 명백히도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한 대중의 관점에서는 현실적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반핵운동은 핵무기가 어떤 식으로든 '정의의 무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하는 반핵운동의 관점에서나,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민족운동, 평화운동의 관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연결하는 전망만이 반핵과 평화를 향한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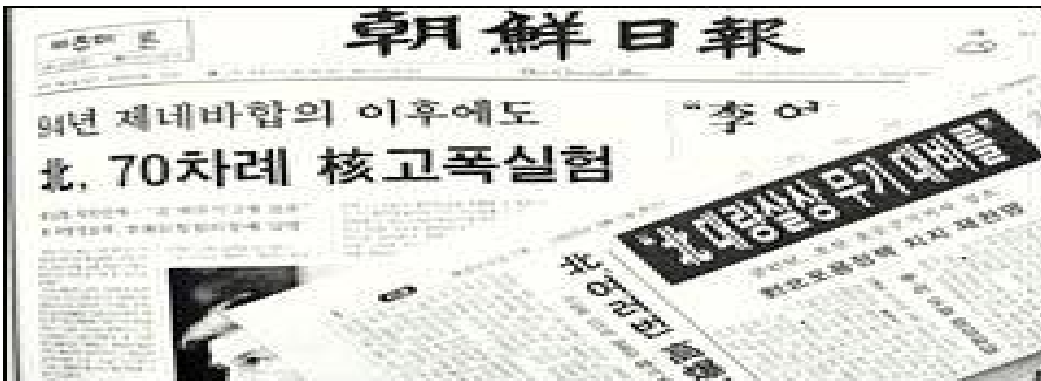
| 토론 4

||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장

조선일보식 대북관, 정세관의 민주노총 침투를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백철현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장



1

2023년 2월 7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핵무력 반대 수정동의안’ 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이 수정동의안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출될 안건이 아니라 조선일보 기사 헤드라인으로 착각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3. 국제 및 한반도 정세에서 이 수정동의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핵무기 확장을 억제함은 물론이고 평화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전쟁반대 핵무력 반대 세계평화를 위해 전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필요함(추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평화와 전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설파하는 이 안은 얼핏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도 이 내용은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핵무기 확장에서 누구의 핵무력 확장을 억제하고 누구의 핵무력을 반대하는 것인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건설명에서 이 수정동의안은 기존 원안의 [국제 및 한반도 정세 서술의 문제]가 있다고 단언합니다. 원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 미국 유일패권이 붕괴되고 신냉전, 다극화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개별국가간·진영간 대결이 심화되고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음.
- 윤석열정권의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반북대결정책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격화.
- 군사적 대결과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평화수호, 중립적 외교정책 등 노동진보진영의 노력이 필요.

수정동의안(?)은 원안에 대해 전면 반대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견안은 “국제 질서 인식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 본격화” 라는 단순한 평가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의 긴장고조와 함께 ‘패권주의·팽창주의’ 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부족하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견안은 원안이 “러시아의 전쟁 행위를 비판하지 않으며 문제의 본지(질)를 비켜 가고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남북한 긴장을 고조하는 남과 북의 군사대응 수위 높이기 경쟁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반도 위협의 책임은 남과 북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있지 않다. 따라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이 70여 발의 미사일을 쏘며 긴장고조에 일조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만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의 핵무장 확대와 정치적 목적의 실험과 발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집권세력이 이에 대응한답시고 핵무장을 공공연히 떠드는 상황에서 핵무장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안은 원안을 그대로 두고 원안을 부분 수정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사실 그 원안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2

이 주장은 결국 미국 패권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미국 패권과 같은 반열에 넣으려는 주장입니다. 이 안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양비론입니다. 이 양비론은 한반도에서 역사적으로 전쟁 주범이자 분단 주범인 미제국주의의 책임을 면피하는 내용으로 일관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침략자, 파괴자, 학살자가 미제와 나토 같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몰타기 하고 있습니다. 침예하게 정치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한 양비론은 양비가 아니라 어느 한편의 입장을 드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것도 양비의 한 대상자(미국)가 일방적인 패권을 휘두르고 강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양비론은 강자가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패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견안은 “최근 북한 정권의 핵무장 확대와 정치적 목적의 실험과 발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집권세력이 이에 대응한답시고 핵무장을 공공연히 떠드는 상황” 이라며 철저하게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북의 핵무장이 원인이 되어 “집권세력이 이에 대응” 한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북핵’ 이라는 것은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미제국주의의 핵독

점, 핵패권주의에서 역사적 원인이 있습니다. 주지하듯, 수천 개의 핵을 가지고, 가장 많은 핵시험을 한 것도 미국입니다. 소련군과 민족해방군대의 투쟁으로 패전이 확실해진 일본에 대해 실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을 실전에 사용하여 조선인을 비롯해 무고한 일본 기층 민중을 학살한 것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에 한반도 이남에 핵무기를 반입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으로 핵위협과 핵공갈을 해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핵공갈, 핵위협에 대해 자위권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북핵입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것도 미국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핵무력 반대 수정동의안’ 을 주도한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NPT가 세계적인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이라크, 이란, 북한 등과 달리) 핵보유국인 중국과 프랑스는 아직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NPT는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전혀 제약을 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이나 핵공격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오히려 미국의 핵정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며, 따라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비핵국가의 핵무기 개발 욕구를 자극할 뿐이다. 그러므로 NPT체제는 반핵(反核)을 염원하는 세계 인민들의 요구를 실행하는데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핵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이후 미국의 핵정책의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 미국이 그동안 한반도에 가해온 핵위협의 실체를 파악한다면 오늘날 미국이 제시하는 핵문제 해결책이 왜 궁극적으로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임필수 정책부장, “한반도와 미국 핵무기위협의 현재성 -미국의 핵선제 공격 옵션은 NPT와 제네바 합의를 위협한다.”,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2002.11.30.호)

1994년 북의 핵확산 방지조약 복귀 이후 경수로 건설과 중유공급 약속, 정치경제관계의 정상화 같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이 그동안 한반도에 가해온 핵위협의 실체를 파악한다면 오늘날 미국이 제시하는 핵문제 해결책이 왜 궁극적으로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는 자신의 발언조차도 새까맣게 망각하고 모든 핵반대, 핵무력 반대라는 양비론으로 미제국주의의 이해에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의 핵정책의 실상을 파악” 하지 않고 최근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 북핵이라는 것도 사실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이 잘 이행되고 조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 폐기되었다면 점차로 사라질 운명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안은 “한반도 위협의 책임은 남과 북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있지 않다.” 며 중립을 가장하며 실제로는 미제와 윤석열 정권의 인식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역사적 관점이 전혀 없습니다. 역사적 원인, 역사적 맥락을 뚝 잘라 버리고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장면만을 부각시키면서 문제의 역사적 원인을 은폐함으로써 원인 제공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2022년 한 해 동안 북이 70여 발의 미사일을 쏘며 긴장고조에 일조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만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일보 식의 뻔뻔한 인식에 대해 이렇게 따져 묻고자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북이 70여 발의 미사일을 쏘 때까지”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주지하듯 2018년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주도한 것은 북이었습니다. 북은 남과 북의 관계개선은 물론이고 조미 적대관계 청산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군산복합체와 전쟁광들은 남과 북의 관계개선, 조미관계 개선에 대해 사사건건 물고 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리비아식 해법 운운하며,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지도자 카다피가 살해된 리비아 사례를 들어가며 북의 일방적 항복과 무장해제를 강요했습니다. 하노이 조미회담이 불발될 것도 미국이 인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해제와 북핵의 단계적 해체라는 사전 합의된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조미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남북 관계도 파탄이 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조미 관계 발전에서 운전자론을 제시했으나 머저리처럼 미국 눈치나 보면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이라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합의 정신과 합의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초보적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전면 중단시키지 않고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미국제 최첨단 무기 수입과 역대급 군사비 증강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머저리 문재인 정권은 운전자가 되기는커녕 시동도 걸어보지 못하고 차안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조선일보 식 인식이 아니라 진보세력이라면, 아니 진보세력이 아니더라도 조금의 이성과 조금의 균형적인 판단력이 있다면 남북 관계 파탄, 조미관계 파탄의 책임은 미국과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북은 이에 항의하여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파탄이 난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이 주장은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북한 주적론, 북핵 선제타격론, 북지휘부 제거, 심지어 최근 핵무장론까지 제시하며 한층 더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아시아판 나토 운운하며 우크라이나에 이어 대만, 한반도를 분쟁지대화, 전쟁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가치동맹’ 운운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반대하는 서방 진영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반중 반러 ‘가치동맹’에 참여하면 전쟁위기 고조를 물론이고 그러지 않아도 가중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보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라는 외교참사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바로 가치동맹에 앞장선 결과입니다.

결국 사태가 이렇게 험악해지자 북은 미국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대강을 예고하며 맞섰 습니다. 미국의 대북 핵위협과 역대급의 한미합동군사 훈련에 맞서 북은 2022년 한 해 동 안 북이 70여 발의 미사일을 쏘며 대항하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 북으로 하여금 선대선에서 강대강으로 정책 전환을 강요했으며 누가 한반도 전쟁 위 기의 책임이 있습니까?

이러한 전도된 인식이 조선일보의 극찬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좌파단체인 '사회진보연대'는 18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규탄하면서, 이 번 사태의 책임이 미국이나 우리 내부에 있다는 북한 추종 태도를 비판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논평에서 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 "연락사무소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 지 않은 국가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외교공관"(이)라며 "폭파 같 은 비상식적 처사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북한 정권을 규탄했다...

사회진보연대는 국내 운동단체들이 대북추종 태도에 대해 "환상을 버리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운동은 현 사태를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과 한국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 럼 보인다"며 "북한의 행동에 알리바이를 주는 것은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고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북한 정권에 알리바이를 주는 남한 사회운동의 행동은 결과적으 로 한반도 민중 전부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핵 개발은 동기도 반민중적이며, 그 결과 도 파멸적"이라고 했다.(정우상 기자, 좌파단체 "운동권, 북에 대한 환상-맹목 버리자", 조선 일보, 2020.06.19.)



사회진보연대는 항상 미제국주의의 이해와 반공 부르주아와 극우 세력들의 이해와 같이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들 단체들을 극구 칭찬한 것은 누가 자기들의 뻔뻔한 이해와 같은 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후각을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전안은 파렴치하게도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는 민주노총 강령과 기본과제를 들어 자신들의 “핵무장 반대” 라는 자신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강령은 전세계 ‘진보적인’ 노동자와의 연대를 말하고, 국제 ‘노동운동’ 의 역량 강화를 말합니다. 전 세계 노동자와의 국제적 연대와 국제노동운동의 기본정신은 자주성입니다. 제국주의 패권과 폭력, 전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에 놀아나는 것이 국제주의 연대고 국제노동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 내용에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위협하고 포위말살하고 제재에 동참하며 핵패권과 핵독점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제국주의식 ‘북핵위협론’ 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인권” 이 미국이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 가하는 인권놀음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과 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문에도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핵위협이 없는 세상과 등가로 교환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 밑에 부속 이행 사항은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은 이미 2018년 5월에 주동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주지하듯, 평양선언에서의 비핵화 후속 조치는 2019년 2월 미국의 하노이 회담 결렬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전안은 고작 몇 년 안의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소역사를 망각한 채 “핵무장 반대” 라며 사태를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남북, 조미 관계가 미제의 횡포로 파탄이 났는데 과연 북의 “핵무장 반대” 라는 게 가당치나 한 인식입니까?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조미정상 회담의 파탄을 통해 모든 핵무장 반대와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결론을 다시금 얻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이해에 복무하면서 민족자주와 자결을 배신하는 권력과 싸워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쟁광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이 땅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파렴치하게도 이와 정반대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보진영의 이름으로 극우 세력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식 반공주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진보진영의 일원이라면 이 역사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분쟁과 전쟁위기 고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위권의 일환으로 만든 북핵을 없애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쟁 위기의 원인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시켜야 합니다.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 군대를 철수시켜야 합니다. 강도와 같은 침략자 동맹인 미일한 동맹을 해체해야 합니다.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미제 침략자를 중심으로 나토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의 침략자, 약탈자였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의도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전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는 제국주의의 인권 프로파간다에 놀아나지 않고 제국주의에 맞서는 각성된 전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여야 합니다. “전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는 반미반제를 공통의 가치로 삼고 각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해야 합니다.

조선일보 식 대북관, 정세인식을 가진 세력들이 진보진영의 이름으로 버젓이 활동하며 심지어 민주노총의 투쟁기조를 전면 훼손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 이들을 진보진영에서 항구적으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은 조선일보와 정권이 반대하는 미군철수, 전쟁반대와 같은 정치투쟁에 더 매진·분투해야 합니다.

I 토론 5

II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신냉전 대결과 한반도 전쟁위기 속 한반도 평화실현의 과제

최은아 |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1. 신냉전 대결의 격화와 미 패권의 약화, 다극화 추세는 동전의 양면

1) 미국은 그동안 자국의 강력한 군사, 경제력을 앞세워 자국에 굴복하지 않거나 지역 장악에 방해가 되는 국가들을 침략전쟁과 지도부 제거 등의 군사적 방법이나 국제기구를 앞세운 제재 등의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유린해 왔다. 중국, 러시아 등의 강국들에 대해서도 한미,미일동맹의 강화, 나토의 확장, 군사력의 전진 배치 등을 통해 견제, 압박해 왔다. 그러나 강압과 전횡을 뒷받침할 경제, 군사역량이 금융위기, 재정위기, 경제위기의 삼중고, 테러와의 전쟁 후과 등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악의 축’,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말살을 시도했던 북과 이란, 그리고 견제를 받던 중국, 러시아는 몸집을 키워가며 미국의 압박에 적극 맞대응하고 있다.

2) 최근 전 세계적인 진영간 대결이 ‘신냉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상당히 적대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진영 형성이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을 띠고 추진되고 있다는 데 그 일차적 요인이 있다. 미국은 나토를 동원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한편, 중국을 자국 이익에 대한 핵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방위적인 반중국협력체계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 자국 중심의 첨단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명분 아래 타국의 첨단 기술 관련 대중국 수출입 기업들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미국내 공장 설립을 압박하며 반중국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개입을 통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자극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가치와 국제규범’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의 이중적 잣대와 ‘자국의 편이 아니면 적의 편’이라는 식의 패권적 압박은 그 본질이 ‘인류 공통의 가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이익’을 위한 세력 구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전세계적으로 이미 긴밀히 상호 연계를 갖고 있는 정치, 경제적 연관 고리를 인위적으로 끊어내고 특정 국가들에 대한 배제와 압박을 강요하는 정책들이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

리 만무하다. 과거 미국의 강력한 경제, 군사 공세속에서 해당 국가들이 굴복하거나 침략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면, 오늘날 해당 국가들은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하여 맞대응하고 있으며, 유관 국가들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무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한 미러 사이의 충돌은 향후 미 패권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제재는 미국이 강력한 경제력으로 해당국을 굴복시키는 압박수단이었으나, 이번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는 40여개에도 미치지 않고 있으며, 대러, 대중 압박에 대한 각국의 이탈 추세도 뚜렷하다. 인도의 대러제재 불참과 러시아산 원유 대거 수입으로 쿼드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토의 한 축인 독일은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나토가 대중국 봉쇄망으로 작동하는 데에서 힘을 빼고 있다. 아세안 역시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말라’면서 중국과 미국 모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동지역 맹방이던 사우디 조차 미국의 원유증산 요구를 외면하고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중남미 지역의 핑크 타이드 추세 역시, 미국의 앞마당에서 영향력이 약화되는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BRICS와 상하이 협력기구 등 미국의 일극 패권과는 다른 길을 가려는 국제적 협력도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록 각국의 세부적 이해관계는 다를지라도 미국 중심의 배타적 일극 패권에 복종하지 않고 각국의 이익이 실현되는 또 다른 길을 가겠다는 지향을 함께 하는 가운데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의 군사훈련,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 개발, 기축 통화 추진 등은 미국이 독점해온 패권국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2023년, 미국 패권 회복을 향한 배타적 진영 형성과 대결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반발 역시 거세질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대결과 이에 맞서는 다극화 추세가 동반되고 있다.

5) 한편,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 정책에 일정하게 거리를 두거나 균형외교를 모색하는 것과는 달리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일본 정부와 적대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신냉전 대결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산소호흡기를 자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편승하여 ‘선제공격’ 능력 확보와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DP 2% 수준의 군사비 증액,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3축체계 무기 증강과 한미 상호 운용성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 미국과의 군사적 일체화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과 미일한 군사동맹 구축 요구에 선봉장을 자임하며 역내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이같은 한일 정부의 행태는 북중러의 반발 등 지역내 갈등의 격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만 문제를 고리로 한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 지속적인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한 북과의 군사 갈등 역시 2023년에 계속 격화될 것이다.

자국 패권의 회복을 위해 미국이 배타적인 진영을 구축하여 신냉전적인 비타협적 대결을 국제사회에 강요하면 할수록, 이에 대한 반발과 외면은 확대될 것이다.

미 패권의 약화와 다극화 추세는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2.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한반도, 관건은 적대정책 중단과 전환.

1) 동아시아는 미국의 패권정책에서 사활적인 지역이다.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 군사강국인 북을 상대하여 자국의 패권 정책을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고 한반도 분단을 피하는 가운데 자국이 주도하는 동맹구조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북과 중국, 구 소련 등을 견제하고 압박해 왔다.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남측과 중,러와의 수교 국면에서 미국은 북 붕괴정책을 그대로 온존, 강화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 북과 서방 국가들과 수교를 가로막았다. 그 이후 30여년간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차례 북미간 회담과 합의가 이뤄졌지만 모든 북미간 합의, 6자회담의 합의에 관통하는 관계정상화와 적대정책 중단 약속을 미국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2)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은 북의 핵능력 완성 이후 성사되었다. 북의 군사능력, 본토 타격 능력을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수년간 외면하던 대화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최고위급 차원에서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의 청사진을 함께 세웠으나, 2018년 북의 선제적인 핵시설 폭파와 핵,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일년만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재개하였다. 기존 북미 합의, 특히 2018년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북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현실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2019년 1년간 북이 트럼프 정부에 유예기간을 준 이후 정책 전환을 선언하고, 바이든 정부 취임 후 1년 동안 신임 정부의 정책을 지켜본 이후 4년간의 핵, 미사일 유예 조치를 무효화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판단에 남북 합의 이행을 맡겨 놓았고, 한미군사훈련 역시 이름과 규모를 다소 조정하는 선에 그쳤을 뿐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투영하여 시행하였다. 미국산 무기도입을 비롯한 국방비 증액은 역대급으로 이뤄졌고, 협상 지속의 관건적 문제였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조치는 어느새 철회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제공격’, ‘떨공’을 후보시절부터 거론하던니 취임 이후에는 3축체계 강화,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실시 등 한층 공격적인 군사압박을 전면화하고 있다. 나아가 확성기 방송 재개, 대북전단 살포 등도 만지작 거리면서 접경 지역 일대의 충돌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일년 내내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의 핵실험 임박’ 설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면서 군사력 증강, 한미연합군사연습 강화,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 진입과 연합훈련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과거보다 대폭 높여 놓고서 이에 대해 북이 반발하면, 다시 이를 핑계로 더 도발적인 군사력 증강과 훈련 확대라는 패턴을 보여 왔다. . ‘위기’의 확대재생산, ‘전쟁위기’의 가속화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4) 북은 지난 해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들에 상응하는 군사훈련으로 맞대응 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군사적 위협은 역설적으로 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느껴왔을 위협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애초에 한반도 위기는 수십년간 계속된 미국의 대북핵전쟁위협, 대북압살정책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북미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적대정책을 이어가고, 리비아, 이라크 정권을 제거하는 등의 무자비한 패권 정책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핵, 미사일 갈등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전횡과 침략정책을 그 어떤 국제법도 국제기구도 막아주지 않은 채 해당 국가의 역량에 전적으로 맡겨 놓은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속에서, 북의 미사일, 핵개발을 세계 패권을 위한 미국의 핵개발과 같은 성격으로 간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미국의 군사적 침략정책, 정권 파괴 압박에 직면한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를 피하고 선제공격 정책을 선제공격 정책으로 맞서겠다는 것에 대하여 그 결과만을 떼어내 비난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침략을 감내하거나 미국의 선의를 구걸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3. 2023년, 미일한 전쟁동맹과 전쟁 정책을 전면화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자!

1)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전쟁을 벌여놓을 태세이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압박과 정권 붕괴, 흡수통일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문제로 비유하며 노조를 사실상 말살해야 할 적으로 다루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국정원 검찰 등 공안 기관을 동원하여 경쟁 정치인, 노조, 사회단체들에 대한 사정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적은 타협이 아니라 말살해야 할 대상인 바, 2023년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에서 펼치는 정책의 적대적 성격과 수위는 최근 보수 정권의 수준을 뛰어 넘는 역대급 행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맹의 강화, 한미일 협력의 강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한 동맹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선언하고, 이후 국방장관회담 등 각종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해 11월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경제협의회 구성 등 한미일 협력을 동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정책과 인태전략을 그대로 모방한 한국판 인태전략을 수립하고, 대중, 대러 압박을 향한 미국의 여러 국제기구들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나토 연락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나토의 세계 확장에 합류하는 등 미국의 전략에 앞장서 적대 국가를 확장하는 행태도 뚜렷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동맹 강화 정책은 철저히 미국 패권을 실현하며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중,러,북, 이란 등과는 적대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한반도 당사자로서 협력해야 할 북 등을 모두 다 적으

로 규정하여 적대로 일관함으로써 경제적, 군사적 위기를 자초하고 나선 셈이다. 이 와중에 식민지배의 침략 당사자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구걸하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기업의 책임마저 면제해 주려하고 있는데,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정책을 가치 동맹으로 포장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3) 정부는 굴욕외교, 자해적 사대정책을 ‘북의 위협’에 대한 대비로 포장하고 있다. 군사 위기 조장을 통해 국내의 여러 불만과 분노를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낡고 있다. 그만큼 윤석열 사대외교, 전쟁정책이 모험주의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2월 1일부터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진출하여 역대급 군사훈련을 시작하고 있다. 3월에는 지휘부 제거, 선제공격 등의 작전계획에 따라 최대규모의 무기와 전략자산 병력을 동원한 한미연합전쟁연습도 예고되어 있다. 북도 강 대 강 정면승부의 원칙, 군사력 강화, 다량의 핵무기 보유 등을 공언한 가운데 전쟁준비태세 완비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미 예고된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길로 윤석열 정부는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다.

4)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의 전쟁정책, 사대매국 정책을 타개해야 한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투쟁에 총력을 다하자.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 전쟁동맹인 한미, 한미일 동맹 반대 요구를 전면에서 들고 적극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윤석열 정부의 사대, 전쟁정책과 공안탄압을 맞받아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이다.

종교, 사민사회, 대중단체등 각계의 뜻을 모아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함께 구성하여 공동의 행동을 규모있게 펼쳐가자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광범위한 상층연대를 구축하는 가운데 현장의 실천을 적극화해야 한다. 미, 일, 한의 주요 군사적, 패권적 움직임에 적극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고, 시군구 200곳, 해외 100개 도시 등 전세계 곳곳에서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는 각계의 실천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자.

3월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투쟁을 시작으로 7.22-8.15로 이어지는 군중적 투쟁을 조직하자.

행동하는 민중만이 권력을 바꿀 수 있다.

강력한 민중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의 전쟁책동을 저지하고, 새로운 자주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내자.